第256回國會 (定期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11月2日(水)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6년도예산안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3. 간사선임의 건
4.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審査된案件

3. 간사선임의 건 ····· 1
1. 2006년도예산안 ····· 1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2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임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7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박창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결정족수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임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소속 간사로 수고를 하셨던 유선호 위원께서 간사를 사임하시고 그 대신 열린우리당에서 임종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임종석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종석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

1. 2006년도예산안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10시21분)

○위원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일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 통일부 업무 전반에 걸쳐 건설적인 비판과 애정 어린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를 깊이 유념하면서 남북관계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북핵 문제가 해결 과정에 진입하고 남북관계도 여러 분야에서 심화·발전을 이룩하는 등 많은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폐기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을 시작하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과거의 북핵을 넘어서 미래의 동북아 협력으로 가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과 동시에 남북 간에도 실질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확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스물여덟 차례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협의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적 남북회담 문화가 정착되고 내용 면에서도 한 단계 성숙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올해 10개월간 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약 7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 한 해 동안의 왕래 인원은 분단 이후 작년까지 50여 년간 왕래한 8만 54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관계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만 합니다.

8월 13일에는 군사분계선 지역의 모든 선전수단이 제거되었고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긴급연락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남북수산협력을 통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합의하는 등 서해상의 평화를 보다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도 안정적 정착 단계로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올해 시범단지가 완전 정상가동되고 1단계 100만 평에 대한 건설공사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9개 경협 합의서가 발효되었습니다. 남북 간 직접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지난 10월 28일 개소되는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 5일 예정된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하면 금년에 두 차례의 상봉행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봉 인원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8·15 계기로 시범 실시된 화상상봉도 금년에 두 차례 더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조치 등의 분야에서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들,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고 이행을 촉구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관계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내년에도 평화번영정책의 큰 틀 아래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병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이제 막 시작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6자회담에서 관련국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북핵 폐기가 빠른 시일 내에 실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에도 한반도 평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와 정례화를 통해 서해상 평화 정착의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 조치들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토대를 더욱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철도·도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이제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을 한 차원 더 높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상 아래 정부는 북핵이 폐기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준비노력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남북 간 에너지·교통·통신 등 SOC 사업과 산업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고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을 지원하며 남북 간 협력을 동북아 협력으로 확대시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협력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북한의 개방은 물론 동북아 안보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핵문제 해결 이후의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셋째,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화상상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산가족의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착공식을 개최한 이산가족면회소는 차질 없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16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이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북측과 협의·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과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경협 비용은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평화비용이자 통일을 촉진하고 통일 과정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준비비용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선투자입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초당적인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추진방향을 바탕으로 편성한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에 처음 적용된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에 따라 주어진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7567억 원으로서 금년 대비 27.3%인 16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6500억 원과 인건비 256억 원, 새터민 정착지원예산 494억 원 등을 제외하면 일반사업비 예산은 317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추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소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남북협력기금, 남북회담 행사비, 새터민 정착지원과 교육훈련 등 주요 계속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통일기반 조성, 본격적인 남북경협 추진,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 필수 소요경비 위

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불요불급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년도 예산규모는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충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규모는 2조 6334억 원으로 남북협력계정에 1조 2632억 원, 공자기금 예수금 4500억 원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경수로계정에 1조 3702억 원—공자기금 원금·이자상환 924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통일 문제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통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서 남북협력기금 사용 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면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11월 5일부터 실시되는 제12차 상봉행사에 10억 원, 제1차와 제2차 화상상봉에 14억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내에서도 에너지 사정이 가장 열악한 개성지역 주민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연료를 지원함으로써 북측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공단 주변 지역에 대한 원활한 산림녹화 추진 등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원 방식은 국내 연탄 수급사정을 고려해 수입 원탄 6만t을 내년 1월 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며 구매·수송에 소요되는 총 66억 원 가량의 비용은 기금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무상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겨울에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 토공 현대아산 등과 공동으로 연탄 5만 5000t과 난로 1만 개를 개성 주민들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재정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역에 관해서 혁신재정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혁신재정기획실장 홍양호 혁신재정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통일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내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주요사업비 내역, 기본사업비 내역, 항·세항별 내역, 부서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 기본방향, 기금운용 규모,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 주실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의 특징은 앞서 장관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내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내역은 재산수입 1180만 원, 경상이전수입 650만 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710만 원, 관유물 매각대 100만 원 등 합계 총 264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2630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가 256억 7800만 원, 사업비는 810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기본사업비가 100억 2300만 원이고 주요사업비는 71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세출예산 소관 합계는 총 1067억 54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943억 2100만 원에 비해 13.2%인 12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은 금년도 5000억에서 1500억 원을 증액한 6500억 원으로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통일부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5943억 2100만 원에 비해 27.3%인 162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756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북아시대위원회 업무 협조 주무부처가 금년도 3월 말에 재정경제부에서 통일부로 변경되어 동북아시대위원회 예산 16억 8200만 원이

내년도에 통일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중간 부분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일반예산의 경우 세부 사업별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으로 계속사업은 통일정책 추진, 새터민 교육 훈련 및 정착금 지급, 남북회담 행사,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운영, 정보화 사업 등 20건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이산가족 실태 조사,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거주지 정착 지원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15건의 사업이며 완료된 사업은 회담사료 관리 운영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사업 내역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100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여기서 기본사업과 주요사업의 구분 기준을 잠시 설명 드리면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경상사업으로 각 부서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기본사업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신규사업 등 별도의 특별한 심의가 필요한 사업들은 주요사업으로 구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 있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항·세항별 내역입니다.

통일부 예산은 크게 통일 촉진, 남북회담, 통일교육,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일 촉진은 본부 소관으로 12개 세항으로 구분되며 남북회담과 통일교육은 각 1개 세항으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에 있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잠깐 좀 기다리세요.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대개 앞에서 설명한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정도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개 다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뒤는 그냥 생략을 하고 질의로 들어가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동안 다 공부들 하셨을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으니까 보고는 이것으로 끝내 주시고 곧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총괄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의 구체적인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자료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예산안은 2005년도에 비하여 22.9% 증액된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센터는 2004년 1월 직제 개정 이래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정보·자료 제공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원 소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며 동 센터를 통일교육원의 시설로 이전한다면 임차료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자료의 공동 이용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정책고객과의 대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집행실적 및 사업 효과 부진 등으로 2005년도 1억 1600만 원 대비 67.7% 감소한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통일정책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2006년도에도 계속 수행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정책고객 마일리지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안은 2억 4900만 원이며 회원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온·오프 라인상의 모든 참여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마일리지 취득 시 금강산 관광권 등 경품을 지급하려는 사업입니다.

먼저 2006년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5년 8월 통일고문회의 사업 예산 등의 전용을 통해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는 사전의 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시민의식의 성숙도를 고려해 볼 때 경품 지급을 통해 유인을 제공하는 사업이 바람직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셋째, 집행과정에서 형평성, 투명성 등의 문제가 유발될 소지가 있는 만큼 금강산 관광권과 같은 과다한 경품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며 통일정책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업의 시상금 및 사은품 예산과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도 3억 700만 원 대비 450%나 증가된 17억 원으로서 대폭 증액 계상되었는바,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의 적극적 활동 촉진 차원에서 보조금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증액으로 막대한 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될 우려가 없지 아니한 만큼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문제 개선 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4500만 원으로 2005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 개최 지원 및 유엔 인권위원회 참관, 북한 인권자료 구입 및 북한주민 사체 처리 등 사업내용도 종전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통일부는 대북지원과 협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유엔 인권위 참석 등 북한 내 인권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통상부에서 다각적 국제협력을 통해 중점 추진토록 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부처 간 업무 분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터민 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40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하나원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2005년 7월 30일 성남분원이 임차기간 종료로 폐쇄되면서 하나원 본원만이 운영되고 있는바, 입국자 추세 판단을 그르쳐 분원을 새로이 임차하지 아니한 결과 2005년 10월 현재 적정 수용인원 300인보다 100여 명 초과하여 교육 훈련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입소인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분원을 임차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수용 여력이 큰 새로운 시설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수로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2006년도 경수로사업 추진 예산안은 경수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 대비 22% 감소된 33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수로사업의 장래 문제는 2005년 11월 20일 전후로 개최될 KEDO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나 통일부는 정부의 입장이 경수로사업 종료로 결정된 지금에 와서까지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경수로사업이 2003년 12월 1일 중단된 이래 2년간 교착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대비가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경수로사업이 종료되더라도 KEDO 조직은 사업 청산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존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미국은 2004년도 분담금 체납에 이어 2005년도에도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06년도 예산에도 분담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KEDO의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집행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뉴욕사무소 파견인력 감축, 사무실 이전 및 불요불급한 항목의 삭감 등을 통해 행정예산을 최소화하여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미국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2006년도 신규사업은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 개성공단 법제 구축 및 개성공단 전파식별 시스템 운영, 3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2억 2400만 원입니다.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 사업은 국내외에서 전시회, 홍보전 및 투자설명회 등을 병행 개최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06년도 예산안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물산전 개최와 같은 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할 성격의 업무보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또는 무역협회 등을 통해 민간주도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2003년 4월 7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규정을 근거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2004년 6월 21일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종래 재정경제부 예산으로 편성되다가 2005년 3월 25일 위원회규정의 개정으로 주무부처가 통일부로 변경됨에 따라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통일부 소속 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통일부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예산의 소관별 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3년도 결산 심사시 정부 측에 예산의 소관별 편성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부 전체 차원의 예산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으나 정부 측은 주무부처를 재정경제부에서 통일부로 변경하고 관련 예산을 통일부로 이체한 것을 처리 결과로 제시한 것은 문제의 소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2조 6334억 원으로 2005년도 대비 1조 3809억 원인 110%가 증가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정부출연금 65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 7500억 원이 주된 재원으로 각각 24%와 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은 사업비 1조 4405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9200억 원이 각각 54%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수로계정에서 경수로공사비 대출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에 의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채무액 규모는 매년 증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남북협력계정에서도 개성공단 등 3대 경제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및 전력 지원에 향후 5조 원 이상이 예상되어 기금 수요는 대폭 증대할 전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 조성을 위해 민간 출연, 수익자 부담금 징수 등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경수로계정 문제는 내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강구와 제13쪽 기금 운용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의 의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문제를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처음에 가벼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열린우리당 지도부 사퇴 이후에 장관님께서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시면서 동시에 참여정부 통일장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언급하시면서 정기국회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5차 6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 산적한 일 처리에 전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더 진도를 나가면 제5차 6자회담과 장관급회담이 끝나면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이후에는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현재는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고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답이고요. 당보다는 아무튼 중차대한 평화문제, 국익적인 관점, 민족적인 관점에서 북핵문제나 남북관계를

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어제 제가 개성공단에서 열린 삼덕스타필드 신발공장 준공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북측 관계자를 만났는데 특히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책임참사 겸 민경련의 책임참사를 겸임하고 있는 분, 실제 제가 다섯 차례 개성공단을 방문했는데 개성공단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분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핵심적인 논란이 되었고 또 남북협력기금의 유용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현대아산과 북측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흥미로운 점은, 최용묵 사장이 사표를 내고 또 현 회장이 사표를 수리한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는 현대아산과 북측 사이에 화해 기류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 가운데, 이분은 이러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도 좋다는 단호한 입장, 그리고 이것이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으로 해석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용묵 사장의 사표 수리는 쇼에 불과하고 윤만준 사장 체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어제 신발공장 준공식에서도 윤 사장의 축사가 대독이 되었습니다마는 윤만준 사장, 그리고 임태빈 상무, 또 사표를 낸 최용묵 사장 3인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방북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부분을……

누누이 이것은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이고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 왜 엉뚱한 내용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최근에 보고를 받거나 또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기본적으로는 현대아산과 아태 측이 본격적인 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깊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척기의 대북사업이 있었고, 2003년 8월에 투자보장합의서 등 4대 합의서 그리고 올해 체결된 9개 합의서 등에 기반한 제도적 보장과 법률적 틀 위에서 진행된 일반 거래의 대북협력사업이 있고, 그 이전 개척기에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같이 특수한 성격의, 특수거래 성격을 가진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북측의 사업 주체와 갈등과 마찰이 빚어진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앞으로는 이런 인간적 신의라든지 특수성에 기반한 특수거래보다는 비즈니스 차원의 일반 상거래 원칙 또 국제 상거래 원칙이 통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행하고 진행하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최성 위원 또 하나 흥미롭게 주장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김윤규 전 부회장의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여전히 현대와의 7대 독점사업은 유효하냐고 하니까 ‘유효하다’ 그리고 최근에 민화협하고의 창구 다원화 문제, 관광사업의 다각화 모색,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의 다각화는 검토한 바 없다’ 이러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는 현대아산의 7대 경협 독점사업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난 국정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대아산이 북측의 사업 주체와 체결한 합의서 독점 계약은 그것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아산이 개척기 초창기에 이룩한 남북협력사업의 성과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남북화해협력에 미친 긍정적 효과 또한 정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와 북측의 사업 주체가 체결한 독점계약이 자동으로 정부의 결정을 기속, 그러니까 얽어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현대의 그동안 공헌이라든지 또 북측과 맺은 그런 합의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자가 대북사업 승인을 해 올 경우에 교류협력법 또 시행령 등 관련 법규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최성 위원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님께서는 남북협력공사의 필요성 또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피력하셨는데, 실제 내년도 경협 협력사업이 1조를 넘게 되고 또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경협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관 반민의 남북협력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앞으로 이것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선 관계부처 간에 TF를 만들어서 북핵 해결 이후에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경제를 어떻게…… 이른바 남북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해서 펼쳐갈 것인가를 놓고 지금 실무 레벨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력공사는 우선 1단계로는, 통일부 내에 협력추진단 같은 형태로 우선 진행을 하다가 그것을 발전시켜서 협력공사 공사체제로 단계적 점진적 발전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된 안이어서 그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후진타오의 방북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것이 북핵 평화 외교 차원도 있지만 중국의 한 2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지원서를 포함해서 경제외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실제 이번에 후진타오와 김정일 위원장 간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미 있는 한반도와 관련된 내부 합의나 결정 사항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 후 주석 방북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고는 정부 내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요하게는 북·중 간에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그리고 앞으로 인적교류, 고위 인사와의 교류, 그리고 협력의 다양화, 그리고 투자의 활성화 이런 4대 합의를 한 것 등은 앞으로 북·중 간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중 간에 또 상호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예측됩니다.

이것은 크게 봐서는 북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경제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험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통신 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센터의 부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협력기금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북 교류협력의 특수성 그리고 또 국내 공단에조차도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직업훈련센터의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들을 볼 때, 또 어제 제가 만난 남과 북 모두, 개성공단에 있는 입주업체 대표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부분이 바로 전력·통신 그리고 직업훈련센터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협의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남북관계의 복합성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기획예산처 역시 이런 발상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장관님께서 특히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이유를 설득시키고, 필요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을 제안하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 중에서 민화협이 갖는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꼬여 있고 한치도 못 나갈 때 민화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지원사업, 그리고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비가 너무 증액이 채 되지 못하고 있어서,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산가족 지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이 부분들을 감당해 내는 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 때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민화협과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정부로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신·전력 지원 부문과 직업훈련센터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통일부로서는 대단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이 기금의 지원 없이 원활한 통신과 전력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 한국통신에 대해서—한국통신은 지금 민영화되어 있는 기업인데요—통신서비스를 적자를 내면서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리

한 요구입니다. 이런 통신과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초기 협력기금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개성공단이 이제 궤도에 올라가서 수천 개 기업이 들어가고 수십만 명이 근무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하면 이것은 상업적 베이스에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불가피하다는 것과, 그리고 직업훈련센터는 개성에 투입되는 북한의 인력들이 5000명을 넘어서 1만 명 수준으로 곧 접근하게 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소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력을 최소한의 직업훈련과 안전훈련을 시켜서 작업장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가 필수적이고, 이것을 기업들에게 출연해서 만들라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개성에 간 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이것은 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금 성격에도 그렇게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통일부의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麗玉 委員 통일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대북 전력 지원에 대해서 비용 분담을 하겠다, 즉 국민 동의를 얘기했습니다.

국회 동의의 절차를 밟은 국민 동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어떤 식으로 밟겠다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앞으로 이행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적절한 시점에 남북 간에 협의가 시작됩니다. 대북 송전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급하게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정해지면 이 계획을 가지고 소요자금을 국회에 보고해서 그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전 계획 전체에 관해서……

다만 아직 5차 6자회담이 11월 9일경 열릴 예정이고, 또 이행계획 합의가 당장 이번 5차 회담에서 결실을 맺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형편에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북 송전을 가령 구체적으로 논의하더라도 그것의 조사라든지 또 용역 내지는 설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또 2006년도 시기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소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그런 실무적 반영의 필요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대북 송전계획과 관련한 예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제 생각하고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행합의서도 체결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번에 된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 대북 전력 지원 680억 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동의가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통외통위에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국민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여유자금 운용비가 남북협력계정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1225억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680억 원이라는 것은 결국 국채 발행 이런 것을 다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 이행합의서가 체결된 뒤에 이런 것을 올려야지 왜 이번에 680억 원을 올렸습니까? 더구나 여유자금이 1225억 원이나 있는데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남북협력계정에 계상된 공자기금 예수금은 정부 출연금과 합쳐서 교류협력사업에 쓰이는 것입니다. 대북 전력지원사업과 직접 공자기금 예수금이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기금 운용계획상 여유자금은 불가측한 남북 관계를 감안해 볼 때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금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 여유자금을 모두 사업비로 계상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점이 발생합니다.

걱정하신 대북 송전계획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계획 합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약간 불확정한 상태에서 대북 송전계획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한 운용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하자면 교류기금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대북 송전 관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사업 항목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관께서 안 읽어보신 것 아닙니까? 더구나 680억 원이라는 큰 돈인데 송전(측량, 환경, 자재 등) 100억 원, 변전(지질 및 설계

용역사업 준비 등) 30억 원, 전력변환설비(부지매입사업 준비 등) 550억 합계 680억 원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보내는 것 아니고는 680억 원을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그것으로 안 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번에 반드시 빼야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수로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田麗玉 委員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력에 쓰여지는 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대북 전력지원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도 모르는 예산이 680억 원이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 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전기 송전, 그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田麗玉 委員 남북 교류의 큰 테두리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디까지나 이행서가 체결된 뒤에 필요한 것이다 이러셨는데 딱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80억 원이라는 돈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지요? 장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산 편성 시에는 기금의 성격상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사업별로 정확하게 예산 배정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만약에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하면 이런 답변서를 통일부에서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80만 원도 아니고 680억 원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남북협력기금 가운데서 여유자금 운용비가 무려 1225억 원이나 있는데 여기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 꼭 써야 되는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왜 올려놓습니까? 그리고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 여유자금이라면, 여유자금 운용비까지 다 있는데 여기에서 안 하고…… 이것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행합의서가 체결된 뒤에 한다고 국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 9월 22일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월 22일에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협력기금은 2000년도부터 죽 보면 대략 적게는 5000억, 많게는 7000억 이런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1000억 원 남짓한 것을 가지고 대북 송전계획에 할당하면 기금으로서의 성격은 상실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년도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력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해 온 실적으로 보면 1000억이라는 돈은 협력기금으로서 사실 여유의 풀이 거의 바닥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자금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합의서라는 것이 올해에 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그 자금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올해 680억 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관 말을 그대로 만의 하나라도 받아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매년 소요될 대북 전력지원 비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채 발행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앞으로 송전계획에 따른 비용 조달은 이행계획 합의 후에 국회와도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송전계획을 통해서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지를 갖고 예산 편성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즉 송전계획과 관련한 아무런 예산적 뒷받침도 없이 6자회담 공동성명문에 분명히 대북 송전에 관한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는 정책 의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국제 사회가 보

더라도 그렇고 이북이 보더라도…… 그런 점에서 대북 송전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조사비나 설계 용역비 이런 부분의 최소한을 반영하는 것은 꼭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田麗玉 委員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까지 통일부는 아무 일도 못 했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안 되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지원책 이런 것은 다 발표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여유자금에서 얼마든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마련이 안 되었으면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개성공단은 어떻게 했고 다른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것은 여유자금이라든가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225억 원이 있으면 일단 그 예산을 통해서 먼저 지불을 하고, 이행합의서가 체결이 된 이후에 말입니다. 그것도 가정입니다. 예산을 가정으로 이렇게 살림 짜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쓰고 국채 발행을 해야지 순서가 맞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인데, 더구나 2006년도에 보면 공공기금 예수금의 국채 발행액이 4500억 원인데 무려 작년보다 9배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수로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앞으로 9년에서 13년간 6조에서 11조 원이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들 것이다 이러면서 이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포 경수로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 예산 끌어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다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통일부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에게 대북 지원 청구서를 이렇게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봉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런 식의 깜짝 지원이라든가, 여기서 틀어막고 돌려막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북 전력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운영계획을 세워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고, 그 신규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지난 10월 28일 11차 경추위가 유감스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경공업 원자재 제공,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철도·도로 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제 분야에 대해서 협상은 가졌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그것이 북측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대한 과도한 요구, 그다음에 수산협력은 북측 군부가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못 했다는 것이 주원인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개략적인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협상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공업 원자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남쪽이 제공한다는 원칙, 이것의 방식, 북이 제공하기로 한 광물자원 이런 것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권영길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수산협력에 관해서 북측이 군부의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우선 일차적으로 묻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군사실무회담을 거쳐서 장성급회담, 또 국방부장관회담까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곧 장성급회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영길 위원 곧 해결될 것이라고……

○통일부장관 정동영 장성급회담에서는 주요 의제가 그것이 됩니다.

○권영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의 남북 간 지원·교류방식의 기본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쌀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쌀 지원에 관해서도 북측이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측도 앞으로 신발이나 의류 등에 대한 원자재 제공을 바라

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차 경추위에서 이미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는 남측의 원자재 제공과 이에 부속되는 지원·교류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다, 아니면 전환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앞으로 가장 바람직하기는 SOC라든지 가령 개성공단의 폐기물이나 폐수처리 등 인프라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산업분야 협력은 상업 베이스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권영길 위원 저도 이런 방식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단순 제공은 힘들고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상업적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광물자원을 받아오고 광산이나 광구를 개발하고 우리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이것이냐 또 나아가서 어떤 거래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를 들면 광진공이 곧 황해도 정촌의 흑연 광산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흑연을 가져다 남쪽에 판매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모델케이스가 됩니다. 앞으로 마그네사이트라든지 철광석 석탄 이런 부문도 활성화되면 상업적 베이스로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경공업 원료도 초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을 제공하겠습니다만 민간기업이 합작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산업을, 북의 신발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북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요약하면 우리 남측은 북측으로부터 광물자원을 가져오는 중심이고 또 북측에 제공하는 것은 신발 의류를 만드는 원자재 제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원자재 제공만으로 그치면 항상 북은 남쪽 지원에 의지하고 또 물량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이 경공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남북 간에 협력을 논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 요구가 과도한 요구라고 한다면 과도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가 공식 협상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남쪽에서는 아무튼 협력기금의 범위 내에서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협력기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령 경공업, 신발이라든지 섬유 원자재 원료 이런 것들을 요구대로 다 지원하면 다른 지원에서 애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권영길 위원 북핵 문제입니다.

지난번 북측 한성렬 차석대사가 미 하원에서 개최된 강연에서—한미연구소 주최 강연이었습니다—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종전의 입장을 계속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는 북미관계의 신뢰가 회복된 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신뢰 관계의 증표로 경수로 제공 및 북미관계 정상화 요구' 이것은 종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전력지원과 관련해서 그것이 남북교류 선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고려해 볼 문제지만 만약 경수로를 대신해 제공되는 것이라면 거부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 북측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수로가 제공되면 전력지원 중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북측은 경수로를 대신해서 제공하는 것이면 거부한다는 것인데 북측이 사실상 지금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성렬 씨 언급은 북측이 미래 경수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중대 제안, 송전 계획에 대한 거부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북측에서 경수로 대신 제공하는 것이면 거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경수로도 제공하고 전력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은 일단 경수로가 건설이 되면 그다음에 전력지원은 중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포 경수로는 종료하고 신포 경수로를 통해서 공급하려고 했던 200만㎾의 원자력발전

양만큼 대북 송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논의될 미래 경수로,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완성이 된다면 그때는 200만kW를 지원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이지요.

○권영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북측이 갖고 있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전력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북측이 이것을 거부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처음의 입장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여옥 위원께서도 대북 전력지원 예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비용, 지질조사, 설계, 남측 부지 확보 및 조성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전 조사 준비한 것은 10억 원 정도면 되는데 남측 부지 확보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다고 한다면 대북 전력지원에 관해서는 북측의 명확한 입장을 알고 지금쯤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남북협력공사설립추진기획단이 이미 발족이 되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TF가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상이라든지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밝히는 것보다 설명을 드리고 남북협력공사가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범 위원 몇 가지 정책질의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예산과 관련한 내용만 질의하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할 텐데 답변은 가능하면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확정시키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예산 관련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동북아시대위원회를 통일부 예산에 포함시켜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업무 소관하고도 직접 관계가 없고 성격조차도 모호한 이런 동북아시대위원회를 과연 통일부 예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위원회는 이미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 일도 있습니다.

(임채정 위원장, 임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과연 소관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이 위원회를 통일부 예산에서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가 있겠느냐,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예산의 소관 문제는 국회가 행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모든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북아위원회에서 금융과 물류 허브에 관한 부분을 떼어냄으로써 나머지 남은 부분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 경제공동체형성 전략이 주 과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박성범 위원 동북아위원회의 설립 취지라든지 사업목표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굳이 재경부 소속이 아니라면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외교통상부에 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이 통일부로 넘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나 여러 가지 설정한 목표도 놓고 보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외교통상부 쪽으로 소관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동북아위원회가 검토하고 구상하고 있는 과제들은 한반도 냉전 해체, 평화체제 구축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교류 협력의 확대를 전제로 한 동북아시대 구상과 남북 문제를 다루고 있는 통일부의 정책 또 업무영역이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재경부 대신 예산 소관 부처를 정함에 있어서 통일부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성범 위원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통일부의 업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남북의 화해·협력과 통일기반 조성이 주

가 되고 동북아위원회의 설치목적이나 근거를 들여다보면 국제적인 분위기 조성이 주목표인데 그렇게 본다면 편안하게 생각해 볼 때 외교통상부하고 관계가 깊은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화협 지원과 관련한 예산인데 이것은 3년째 국민합의기반 확대사업에 예산이 편중되고 대북교류사업의 비중은 극히 저조한데 2004년 결산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새해 예산에도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사업내역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민화협에는 3억 5000만 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 통일사업이 2억으로 제일 많고 민화협 통일포럼, 민족화해지 발간에 1억, 해외동포초청, 대북교류협력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박성범 위원 통일부에서 감독권 행사도 안 되고 사업비 중에 대한 조정도 별로 실효성 있게 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가 사업내용도 똑같이 예산도 똑같이 되는 것을 보면 감독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사업내역에 대한 지도도 먹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화협이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민화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돈이어서 자체 후원회 등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2004년 결산 때 발언록을 봐도 몇몇 위원께서 통일마라톤이나 평화음악회 같은 관례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벤트성 행사에 예산의 70% 이상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그 당시에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액수의 똑같은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다 이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감독권을 좀더……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만 사업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남북교류에 관한 사업예산은 그대로 제한되어 있고 국내사업이 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한 감독권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박성범 위원 다음에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아까 내년도의 주요 정책목표에 이산가족 상봉을 상당히 중요한 목표로 잡으셨는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4억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34억의 교류경비하고 7억, 이것은 동결이 되어 있고 이산가족면회소 건립비용이 16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 건립해서 장기적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1세대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살아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가족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지원과 이산가족 교류 경비는 그대로 동결되어 버리고 거기에 면회소 건립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산가족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만 해도 4개입니다. 이만큼 국회에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좀더 책정해 가지고 1년에 다섯 차례를 만나든가 열 차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장기적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족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이산가족 면회소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통일되면 이 면회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선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산가족들이 좀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으로 봐서는 작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하면서 사업설명에서는 내년도 이산가족 상봉을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과 사업계획이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내년도에는 마침 인구센서스에 이산가족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포함되어서 좀더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산가족 재회사업에 보다 다양한 정책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성범 위원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보다도 투명성 확보나 기금운용의 실리성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아마 민간평가단 운영계획

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각 부처는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협력기금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평가단은 평가단대로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립적이고 엄정한 입장에서 협력기금의 집행상황을, 즉 적정성과 투명성 여부를 따져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성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일캐러밴 운영하고 통일환경조성사업하고 하나는 기존사업이고 하나는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통일의지나 통일방향에 대한 국제 의지를 넓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분리해서 신규사업을 하나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는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정책홍보실장 이관세 통일캐러밴사업 편성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 워크숍 대북정책설명회 하는 사업을 통폐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해외…… 찾아가는 세일홍보를 일원화 해 가지고 대북정책설명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략개발을 해서 워크숍하는 것을 통폐합해서 예산편성에 보시면 1억 2700만 원의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이 전액 삭감됐고……

○박성범 위원 통일환경조성사업은 뭡니까? 그것도 보니까 비슷하던데요. 이것은 캐러밴 타고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통일환경조성사업인가요? 캐러밴 타는 것은 캐러밴 사업이고……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그 사업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보기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통일환경조성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더 추가해 가지고 예산도 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나중에 예산심의 때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박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 위원 조금 전의 장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신포 경수로 대신에 전력 200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수로 설치 대신에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경수로 플러스 200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냐를 제안하실 때 구분을 지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현재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수십조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김정일 위원장과 앉아서 이야기하실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핵을 포기하고 신포 경수로를 종료하는 대신 200만㎾를 직접 송전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고 한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래의 경수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특정 시점에 고정해 놓고, 2005년 2006년의 시점이 아니라 북이 NPT에 가입하고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그런 과정, 이것이 한두 해가 걸릴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가 논의되고 그래서 이 경수로가 완공되려면 길게 봐서 13년 뒤의 일이다 이렇게 정부로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길게 봐서 최장 13년…… 그러면 2018년 이때쯤 가면 북한도 경수로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0만㎾ 송전은 그때 가서 중단하든지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모두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얼마 전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수로 건설해 주지 않으면 200만㎾ 전력 공급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어쨌든 전략적인 면에서 이것이 서로가 결론을 내지 못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북한 당국하고도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의 남북협력을 위한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991년도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총 5조 5300여억인데 이 가운데 민간출연금은 총 22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통일부의 중장기사업 계획을 보면 남북경제협력 부문의 투자가 약 4조 9000억 원, 그리고 앞으로 남북경제협력 확대와 또 대북 전력지원 등을 감안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중장기적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서 민간 사이드에서 재원 조달을 받을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1인 1통일주 갖기 운동이라든가 북한 의식주지원 모금운동 기금을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민간 재원을 조달하는 이런 방법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대북지원 남북협력에 들어가는 재정과 채권 발행으로 쓰여지는 공공자금 예수금 부분은 그러니까 펌핑 워터, 물을 뿜어낼 때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투입비용의 성격이 있고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남북협력이 제도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남쪽에 있는 여유자금이 북에 투자사업으로 변환되어서 진출할 때 소위 재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고동시에 또 대북투자와 남북협력, 대북협력사업은 우리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 핵문제 또 남북문제 자체가 국제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고, 6자회담이 당장 그런 반증이지요.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아주 긴요하고 또 국제사회의 그런 금융 지원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재원 해결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돼야 할 분야입니다.

○김혁규 위원 여하튼 민간자본이 투입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탈북주민 거주지 정착 지원 온라인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혁규 위원 지난달 20일 한창권 자유북한인협회 회장이 탈북자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한 회장의 말에 따르면 국내 체류 탈북자 수천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귀순일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긴 자료가 북한에 유입되어 가지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노동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보내지는 등 신상 노출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시스템이 탈북주민 신상에 대한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어 이러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지, 또 이것을 꼭 돈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걱정하신 대로 이런 신상자료가 유출됐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에 관한 신상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 유지를 위해 더욱더 관리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혁규 위원 민주평통에서는 안 나오셨지요? 통일부장관님이 민주평통과 관계는 없지만 중앙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시·군 지역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회장 변동 후 일선 시·군의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일부 자치단체장의 비협조로 지금 기관 운영이 잘 안 되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영남의 경우에 제가 내려가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민주평통 지역협의회가 성격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평통의 예산 배분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서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통이 개편되고 다시 구성됨으로써 그 이후에 특정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평통,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행자부 이런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애로가 시·군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성격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매칭펀드 식으로 부

담해야 될 경우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부금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해서 중앙정부에서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불평들을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김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이화영입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예산안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동북아시대위원회 예산이 재정경제부에서 통일부로 이체된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동 금액만큼 재정경제부 실링을 줄이고 통일부 실링을 증가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톱다운의 총액에서 재정경제부 소관이었던 것이 통일부로 이관만 되어 온 그런 경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맞습니다. 재정경제부 실링을 통일부로 17억 원 이관했습니다.

○이화영 위원 통일부 내에도 동북아시대추진단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제가 주로 동북아시대위원회 업무를 죽 살펴봤더니 외교통상부 소관 업무도 물론 있지만 대개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그래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발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남북 통합을 위한 국내 역량 구축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또 주로 동북아시대 협력 인프라, 남북대륙철도 연결 이런 쪽, 통일부 업무 소관이 대단히 많아서 외교통상부에 두나 통일부 예산으로 두나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와 여러 가지로 업무를 협조하고 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 소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지난 9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투명성 문제 때문에 사회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장관께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민간 평가단이 구성됐고 1차 회의를 했고 통일부와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의회 민간위원도 12월 1일자로 추가 위촉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기금 지원에 관해서 심사하는 절차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화영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분석한 기금 집행 실적들을 보니까 남북협력기금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협력기금은 사실 그 자체가 투명하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엉뚱하게 협력기금 유용 의혹이 사실근거도 없이 유포되면서 대단히 신뢰에 타격을 입었습니다마는 최근 김윤규 부회장도 입국하면서 협력기금 유용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나중에 금강산 도로포장사업을 실사해서 할당된 예산만큼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유용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한 점 의혹을 갖지 않도록 사후에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리고 기금 운용의 통합 필요성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4억 원이 남북협력지원금으로 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5억 원이 민족문화교류지원금으로 가고 방송발전기금에서 45억 원이 남북방송교류사업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남북협력기금에 통합 계상해서 운용되어야 된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통일부와의 조정, 총괄 과정을 어떻게 거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통일부에서는 매년 각 부처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교류협력이 균형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기금의 사업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총괄 조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이 협력기금에 통합 계상되는 것이 단일한 협력기금 운용 체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화영 위원 그런 의견을 기획예산처 같은 데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실무선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우리 국회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에서 상당한 액수인 6572억 원이 세부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해선 연결에 340억 원, 경의선 CIQ시설 건립비에도 상당한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북한철도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철도와 흔히 얘기되는 시베리아횡단철도라든지 중국철도라든지 몽골—TMR, TCR, TSR—철도와 연결하기 위한 통일부 차원의 심도 깊은 태스크 포스라든가 전략센터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제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민간 영역이라든지 전문가들 영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부 영역에서만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담당 주무 부서들이 건교부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외교통상부라든지 이런 데로 산재되어 집중이 안 돼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10여 년 동안 계속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진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스럽거든요. 이렇게 동해선이라든지 경의선 관련 사업비가 책정되고 집행되는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전략단위를 한번 설정해 보는 것은 어떤지,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대로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같은 것들은 남북 화해 협력의 초기단계에서 정치적 결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북핵문제가 해결 궤도로의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부와 함께 정부의 경제부처들이 결합해서 한반도 전체의 경제 효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경제원리의 입장에서 같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그 효율의 우선순위가,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경제부처 등과 함께 한반도 경제 구상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TF를 최근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작업이 되면 TSR, TCR 문제에 관해서도 정부로서의 추진 전략이, 그 그림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위원 통일 캐러밴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박성범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했었지만 우리가 6자회담 당사국을 대상으로 한 어떤 통일 외교, 또 앞으로 북한의 SOC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통일부장관 혹은 통일부 영역에서의 활발한 외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 캐러밴 운영은 그와 같은 사업에 부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일부차관이 캐나다에 가서 동포사회 또 평통 등과 대화를 갖고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해외에서도 여기에 대해 대단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화영 위원 그래서 다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활발하게 해서 북한의 문제가 위기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적 요인이 많다는 부분을 설득해 내고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잘 분담하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이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밖에 지금 계속 관례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통일고문회의 비용이라든지 북한 인권자료 구입비, 또 정책고객 마일리지 시스템 문제, 실국별 분과 자문회의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위에서 한번 세밀하게 따져서 불필요한 부분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 동북아시아시대위원회의 14억 4800만 원 예산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과 저는 같습니다. 전액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가 많이 보도도 되고 또 장관께서 발표도 하는데

전기, 식량, 인구, 신발, 의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을 도와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태를 알고 도와주자, 선 실태조사 그다음에 국민 동의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실태를 알게 될 때에는 도와주자는 데에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 실태조사 그다음에 국민 동의를 구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북한에 많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 없이 장관님이 몇 마디 말씀으로 그냥 어렵다, 또 이런 간단한 그런 것만 갖고는 몇백억 몇조를 도와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아니냐, 이것이 적어도 현대국가라면 예산체계상 어렵다 그렇게 봐서 남북 간에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제안하셔야 안 되겠느냐, 다른 사업보다 말이지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인구실태조사, 정말로 각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남녀 간에 인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최근에 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인구가 엄청 줄었다, 예를 들면 2300이 아니고 1800 내지 19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 갔느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고, 또 만나기도 했고, 인터넷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남녀별·지역별·연령별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통계로 잡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한을 침략할 의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점에서 절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식량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 어떤 곡물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만약 감산이 된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 전력·신발·의류, 방금 이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도도 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은 수해 때문에 완전히 못 다닐 정도로 철로가 못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실태를 보고 도와줄 것은 또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북 당국 간에 공동협력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없습니다.

장관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먼저 실태조사가 잘 되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효율적인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요. 북의 여러 체제의 특수성상, 또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공업 광물 지하자원 협력에 있어서, 예를 들면 흑연광산에 관한 광진공의 사전 조사 작업이라든지 또 무산 철광석 지역에 대한 조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지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경공업 원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실무협의를 할 때 북의 신발공장을 두루 살펴 본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글쎄 저는……

이런 것 있지요? 예를 들어 지하 광물을 조사하자 이러면 이것이 또 군사시설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되는데 그런 복잡한 것 말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누구에게나 비밀이 될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북의 군사기밀하고 상관이 없는 것, 예를 들면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군사기밀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군사용은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간단한 식량이나 이런 것들부터 쉬운 것부터 해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의지가 우리 남쪽 당국에 너무 없다, 이것은 실제로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더 망가뜨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현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통일부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잘 하신 것 중에 하나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당신이 이산가족이냐', '누가 이산되어 있느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조사로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잘 하셨고, 또 그중에서 3000 샘플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관심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 문제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그것은 참으로 인도적이고 잘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제가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데요.

여기 죽 아까 보고하실 때도 나와 있는데,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중에 특히 김동식 목사 건 제가 많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문수 위원 이분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군포로 한만택 씨 지금 평남 북창군 신성천 18수용소에 가족들하고 갇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군포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만택 씨 조카인 한성구 씨와 그 조카며느리 심정옥 씨가 장관님 면담 요청해 놓았지요?

지금 서면으로 면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꼭 면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만택 씨도 중국까지 나왔다가 도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남북 간에 각급 회담이 있을 때 좀 관심을 표명하셔서 이분이 수용소에 가 있는 것은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장관님이 좀 관심 표명하시고 각급 회의에서 말씀하시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안 있겠느냐, 꼭 송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것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국군포로·납북자라고 이쪽에서 주장하고 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남북회담 때 그분들을 전부 실태조사를 하자면……

북한에다가도 우리 자료를 넘겨주신 적은 없지요? 이런 납북자들이 있다고 우리 남측에서 주장하는데 좀 조사해 줘라……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것을 지난번에……

○김문수 위원 부분적으로 남북이산가족회담할 때 몇 명씩 하는 것은 아는데 전체 명단을 가지고 북에 주고 또 그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난번 16차 평양장관급회담 때 그 명단을 정식으로 북에 전달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은 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번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대해서 생사 확인을 협의하고 이것을 해결하자는 데까지는 진전이 되어서 다음번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그 명단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남쪽에 있는 가족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신청을 우선 받아서 장관님 주재하에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주장하기보다는 가족들의 이런 요청이 있다 그것을 북에다가 전달하고, 인도적인 선처를 바란다, 그래서 그 답이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까지 해 줘라 이렇게 인도적인 문제를……

북이 사실 협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인권문제하고 다르게 장관님이 집중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하자고……

우리 야당에게 말할 필요도 없이 잘 하시면 저는 그것이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꼭 좀……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문수 위원 저는 워낙 주변에 이런 분들의 기막힌 사연이 많아서 매일 울고불고 돌아가시고 이런데, 1년에 3000명～4000명 돌아가시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정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내년도 인권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즉,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실 의지가 없다, 저는 계속 촉구를 해도 의지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을 더 하자, 이 예산 세우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더 드립니다마는 사업을 더 발굴하고 예산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조사 사업이나 생사 확인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감하게 좀 하시고, 북에 대해서도 생사 확인도 해 주고, 그다음 국군포로도 우리가 송환해 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보너스를 주자 말입니다. 지원도

더해 준다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뭘 도와주면 자기들이 인도적인 길을 걸을 때 이익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자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도적인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장관님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국군포로·납북자 실태와 관련해서는 가족 모임에서 제출한 명단은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실태 이런 것과 관련한 조사 사업 부분에 좀더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EU가 유엔총회에 낸 대북인권결의안 여기에 대해서 보도되기로는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또 기권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오보이기를 바라고요.

책임 있는 NSC의 책임자로서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 입장이 결정된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앞으로 여러 가지 제출되는 결의안 내용과 그리고 기존 정부가 밝혀온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기권하기로 했다는 것은 오보네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보도는……

저는 그 오보로 나간 소스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오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쎄 그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한번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현재 어떤 회의체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실무자가, 장관님 잘 아시는 실무 책임자가 그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월권적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케 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위원 유선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까지 그동안 열린우리당 간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통일부 측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첫 번째로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해 왔고, 집행 실적도 매년 30%씩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국민적인 합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야당 등 입장에서는 그저 적게 쓰는 것이 능사다 이런 논리도 제기되는 것 같고, 또 우리도 지금 과연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확신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기금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최소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정부 예산의 1% 수준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감사하는 중에 독일에 가서 그런 사정을 좀 들었는데요, 통일하기 전까지 30년간 500억 불을 썼는데 통일 이후에 12년 동안 1조 3000유로가 들었고, 앞으로도 통일 비용이 그 정도 드는 상황에서 독일인들은 통일 전에 우리가 조금 더 통일 비용을 미리 썼으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회의의 목소

리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김현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4차 6자회담이 타결됨으로써 실제로 남한 측에 110조, 북한 측에 57조의 경제효과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무슨 연구원의 통계를 빌려서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 동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또 주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이 370억 달러로 예상하고, 그럴 경우 690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650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는 수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비용 또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좀더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이번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하나 만들어서 냈는데 주요 내용은 앞으로 우리 신용도가 올라가면 해외 차입이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길도 터보자 이런 내용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 6500억의 남북협력기금 정부 예산은 사실상 이렇게 증가되는 남북 경협 규모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불가피하게 마련해야 될 평화비용, 통일비용의 규모를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서 한번 계량화하고 이것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1년도 화해협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확보한 돈이 약 7700억 규모였습니다. 당시 2001년도 예산이 94조에서 올해 예산 규모가 134조로 약 50% 증가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은 7700억 규모에서 올해 6300억 규모로, 그러니까 예산 대비 남북협력기금의 비율이 오히려 절반 가량 줄어드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있어서 공자기금 예수금, 즉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성되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통해서 메울 수밖에 없는…… 오늘 일부 석간 언론 같은 데도 보면 빚내서 대북 지원한다는 비난 논조를 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2001년도에 비해서 5년이 경과한 오늘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그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동안 남북 협력의 발전과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그래서 이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비용 지불 없이 확고한 평화, 공고한 평화가 가능 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시점에서는 과연 어떤 정도의 선이 적정한 지불 기준인가, 우리의 경제 규모와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토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선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일 전에 우리가 투자한 액수의 효과, 그리고 통일 이후에 들여야 할 불가피한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통일 전에 우리가 미리 좀더 통일비용을 지출하고 사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효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불가피한 규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투자를 했을 때 기간에 대한 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유선호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경협자금 대출 예산이 전년도 수준인 400억 원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본 단지가 본격 가동될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 과연 내년 경협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융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의 애로사항 중에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좀더 융자자금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통일부도 절감합니다.

○유선호 위원 이것에 대한 보충적인 대안으로 투자기업에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대출받게 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 비율을 보증해 주는 채무보증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 남북협력사업, 물론 수익이 보장되는 데 일반 금융기관의 관심과 투자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북협력이 좀더 제도화되고 실적을 쌓게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투자도 유인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유선호 위원 지금 개성공단 법 제도 구축비용이 3억 97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유선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지 개성공단 법 제도만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남북 간 법제 통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면서 남북 간의 법령 제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제도 정비 이런 쪽의 조사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정책고객마일리지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민간 영역의 재량권을 좀더 확대하는 방법에 의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주신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委員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장관님에게 조금 듣기가 거북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쓴소리를 조금 할까 싶습니다.

장관님, 며칠 전에 서강대학교 강의를 가서 가지고 김정일과 노 대통령의 평가가 어떠냐 하니까 김정일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화끈한 지도자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도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식량 부족 등으로 소위 인민들, 백성들을 연간 20만 명씩 굶겨 죽이고 10년 사이에 300만 명이 죽었느니 어쨌느니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미사일이나 핵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든다고 광분해 왔습니다.

또 소위 쪽박을 차 가지고 세계로부터, 또 우리나라로부터 얻어먹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매번 큰소리만 치고 이번에는 보니까 신발도 6000만 켤레 내라, 양복도 2000만 벌 내라, 비누를 2억 개 만드는 원자재 내라, 과연 통이 크기는 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 대통령…… 작년에 우리나라의 세수 부족이 아마 4조 원, 금년에는 한 4조 6000억쯤 된다든가요? 내년에는 8조 원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주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것도 세금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작은 정부 알뜰한 살림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보다는 그동안 공무원을 2만 300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1조 3000억의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는 8000명을 또 증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차관급이 22개 자리가 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대통령 직속하에 2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는 358개가 있습니다. 친일진상특위 인권위 등 6개 위원회 예산에만 540억 원을 순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기구도 늘리고 북한에도 화끈하게 주는 것, 역시 화끈한 지도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관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규모가 2조 6334억 원입니다. 우리는 조라고 하니까 어떤 숫자인지 모르고 넘어갑니다마는 정말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주면서 그저 우리 철도를 불씨로 해 가지고 연간 국민 1인당 2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데 그 정도 비용 북한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일한 발상을 한다는 것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님도 통 크고 정말 화끈한 장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지요. 정말 작은 정부로 만들어서 알뜰살뜰한 살림을 살아야지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정책에 쓰면 그것은 국민 전체,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다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경수로계정이 1조 3702억 원인데 원리금 상환한다든가 이자 상환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3041억 원이 내년에 지출할 것인데 이것은 7월 12일 대북송전계획안이 발표되기 전에 계획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KEDO 하고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경수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고 난 후에 이 금액은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이 돈은 쓰이는 데 따라서 공공자금 예수금에서 출연을 받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채권 발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崔炳國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으로 3041억 원을 책정해 놓고 이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출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래서 만약에 KEDO에서 다시 결정이 되면 이것은 한푼도 안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KEDO 결정에 따라서 종료가 되더라도 청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KEDO 조직은 당분간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이것은 유지·관리하거나 잔존 재산권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崔炳國 委員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유동적입니다.

○崔炳國 委員 그런데 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책정했을까요? 178%나 증액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를 들면 공사를 종료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 클레임이 제기되면 청산 절차에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규모는 좀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큰 부분입니다.

○崔炳國 委員 확정되지 않은 액수라도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해 가지고 펑펑 쓰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회담사무국 예산이 85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북회담사무국에 직원이 8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남북장관급회담이든지 남북 간에 무슨 위원회 개최한다든가 이것을 뒤에서 실무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주종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崔炳國 委員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남북장관급회담이 4회 예상되어 있는데 예산이 7억 800만 원입니다. 한 번 장관회담 하는 데 2억 가까운 돈이 든다는 것 이것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됩니까? 남북군사회담 2회 하는 데 1억 5200만 원입니다. 물론 회담 전체 비용을 우리가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담 한 번 하는데 2억 씩 국가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것 보면서, 물론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대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회담 한 번 하는 데 2억 씩 비용을 쓴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 1급 공무원이 3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9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방만한 예산이나 인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자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내년에는 3억 9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자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소위 북한에서 자기들 체제 선전하는 영화를 보여주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지 않은 게 아니냐 했더니 장관이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대충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이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13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8만 명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위해한 영화를 관람시키는 게 아니냐, 당과 수령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든가 사회주의 농촌 건설, 노동당 결정에 대해 생명을 바친다든가 당에 대한 충성, 사회주의 건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인데 북한자료센터 운영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청소년들에게 좌경의식화교육을 시키는 장이 안 되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이것도 챙기세요. 저는 장관님의 인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좀 챙기세요.

그리고 거기의 임차료가 1억 8999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1억 9000만 원쯤 되는데 이 시설도 종로 광화문우체국 6층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

다. 통일연수원 같은 데나 통일연구원이든지 이런 데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임차료 안 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남북협력사업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 바로 알기도 좋고 여러 가지 해야 하겠지만 이 어려운 때에 살림을 좀 알뜰히 산다는 그런 것도 표시를 해야지 그저 흥청망청 해서 1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 GDP에 비하면 1%도 안 된다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알뜰한 살림을 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 금년 1년은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님이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남북관계가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통일부 정 장관님과 전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3일이 독일 통일 1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통일 이후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 투입보다는 통일 이전에 북한 스스로가 자기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독일은 통일 이후에 15년 동안 1조 2400억 유로를 동독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50조 원에 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씩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100조 원씩을 투입하고도 동독 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독일의 재정 적자와 실업률 증가라든지 통일의 후유증은 아직도 아주 심각하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라든지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간의 경협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경협의 제도화 이런 것을 시작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출연금을 6500억 원으로 증액한 것도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노력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대북지원사업에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퍼붓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적 시각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북지원사업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청사진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한다든지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협력사업도 3대 경협사업에 더해서 농업 수산업 경공업 광물자원협력 이런 분야로 전개됨에 따라서 협력기금의 수요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성, 투자의 우선순위, 지원의 우선순위 이런 쪽으로 질적인 발전을 기해 가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이제 많이 커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최근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서 오전 회의 때도 장관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북한과 중국 간의 대규모 경제협력 관련 사항들에 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 측의 대북경제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또 북한의 향후 경제발전 또는 경제개혁의 과정을 중국이 주도하거나 또는 선점할 우려는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상대적으로 화해·협력 정책이 진전되면서 사실 남북 간의 지원·협력 규모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북한과의 거래 규모를 초월해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제1수출입국이 중국이고 우리가 두 번째 입니다마는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역 부문에 있어서도 머지않아 우리가 1위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이고 분명한 것은 인도 지원, 쌀이라든지 비료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점이 또 남북 간의 신뢰를 쌓는 데도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북지원이 일방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도 적시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인도 지원과 더불어서 산업협력, SOC 협력 이런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죽 진행이 될 때 대북투자 대비 우리 경제 또는 남쪽에 대한 효과가 10배에 이른다는 연구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증대라든지 또 국가신인도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라든지 특히 국가자산 가치의 상승,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북 지원 비용의 10배에 이르는 효과를 남쪽 경제가 얻는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좀더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좀더 넓어져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위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지나치게 맹목적인 통일 지상주의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에 규정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 등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전제로 한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독의 경우에는 서독헌법 전문에 통일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그러한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서 서독은 꾸준히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좀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도 높아지고 명분도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협력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권친화적인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관님의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하는 것은 대명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전 세계 여타 국가 가운데 북한 인권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하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북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인권친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 한국만큼 노력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홍준표 위원 10월 31일 서강대학에 가서 가지고 특강을 하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측을 압박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인권 개선하라고 떠들어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

야기입니다.

○홍준표 위원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2006년도 예산안은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4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것은 무슨 세미나 지원 이런 예산이고……

○홍준표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2006년도 예산안이 4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서는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나 예산적 뒷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독과 동독의 경우에는 1961년 8월 동독에 의해 베를린장벽이 설치되자마자 서독에서 그해 11월 동독의 접경지역인 니더작센주의 잘츠기터라는 곳에 중앙범죄기록소를 설치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잘츠기터 보고서라는 게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서독에서 그 자리에 중앙범죄기록소를 만들어 가지고 동독의 인권 침해 상황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60년부터 30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통일이 되고 난 뒤 기소를 했어요. 동독에서 살인행위, 정치적으로 핍박을 가한 주모자들 전부, 4만 2000건을 조사했어요. 살인, 불법 구금…… 정치범들을 살인하고 불법 구금하고, 서독 정부가 30여 년 동안 동독의 인권 상황을 감시했습니다. 그것을 감시하면서 동서독이, 베를린장벽이 처졌을 때도 서독이 동독에 대해 원조를 많이 했지요. 우리보다 아마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비교가 안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서독은 30년 동안 동독에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일되고 난 뒤에도 실지로 기소를 하고 중앙범죄기록소가 잘츠기터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중에 동독의 소위 정치범이라든지 그런 게 무언의 압력으로 인권 상황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국력에 비해, 서독이 동독에 지원하는 것보다 아마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것을 평화비용, 통일비용, 선급비용이라고…… 그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서독의 예를 보더라도 잘츠기터에 있었던 중앙범죄기록소의 존재, 그 활동이 동독의 인권 침해 상황을 실지로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 할 때다 이것입니다. 실지로 내가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가능하면 북한 자극하지 말자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엔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권고 결의안이 나오면 정부에서,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총리도 안 하고 장관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입장이 없습니까? 지금 곧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올라올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난 본회의에서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정부의 입장이 곧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세계 유럽이나 유럽연합(EU)이 주도해서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가장 걱정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결의안에서 당연히 기권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우리가 경제원조도 하고 합작투자도 하고 평화비용, 통일비용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정치범 탄압, 정치범 수용소 그것은 풀어야지요. 그것을 장관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디 유엔 본회의 석상에서 기권하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기권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가장 걱정하는 나라가 거꾸로 기권하고 EU에서 주체가 되어 죽 제기한 이것이 전부 찬성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장관님이 주도하셔 가지고 지난번과 같은 두 번에 걸친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만약 다시 기권하면 비난 많이 받을 겁니다.

두 번째, 통일비용을 아까 죽 말씀하시면서 GDP 1% 수준으로, 아까 우리 유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장관님이 좀 늘려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독일 통일이 91년도에 될 당시 서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7000달러였습니다. 세계 2위였지요. 그런데 2005년도 독일의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압니까? 통일된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모르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2만 5000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2만 2000불입니다. 세계 25위로 전락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당시 경제규모가 한 4 대 1 정도 됐습니다. 지금 남북한 경제규모는 23 대 1 정도 되지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아마 비교가 안 되게 경제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비용, 통일비용을 우리가 선급하는 것, 나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평화의 신호는 남북한 군축회담입니다.

지금 우리가 60만이고 북한이 117만 아닙니까? 세계에서 군사밀도가 이렇게 강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실감을 하는, 북에 좀더 지원해도 되겠다고 안심을 느끼는 것, 북핵문제는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휴전선에 배치된 군을 적어도 40㎞씩 뒤로 물리고, 우리 쪽도 물러나고 저쪽도 물러나고…… 군축회담을 하면서 DMZ 이쪽을 갖다가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 군축회담을 먼저 하셔서 그것을 물리는 것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군만 국방 경량화한다고 해서 지금 70만인가 60만에서 다시 50만, 40만으로 줄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앉아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117만이 존재하는 북한군도 군축을 해야 되겠지요. 북한이 못사는 가장 큰 이유가 선군정치하고 군에 모든 경제력을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장관님께서 본격적으로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군축회담 같은 문제는 가장 선결 문제이고 휴전선에서 만약 남북한 군사가 40㎞씩 이동하면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정말 평화가 오는구나, 우리가 평화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핵문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장관님이 고생하셨고 그 문제가 앞으로 잘 풀려 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북한 군사회담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군축회담 빨리 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감축한다…… 그것은 국방개혁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저쪽에도 군축을 요구하고, 지금 117만에서 감군하자고 서로 감군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군 배치를 휴전선에서 떨어지게 한 40㎞씩 물리면 국민들이 안심하겠지요. 그런 가시적인 정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만 하더라도 정의용 위원이 말씀하실 때 장관께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우리만큼 걱정하는 나라가 세계에 없다, 그것을 장관님께서 가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정부에서 하는 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 사람들 말이야, 저 친구들 북한 눈치나 살살 보며 퍼주기만 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일반화된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부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국제사회나 유엔 같은 데 가서도 믿음 가게 해 주시고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같은 것을 우리나라 파주 정도에 설치해서 우리도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 후를 생각해서 다소간 그쪽 사람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됩니다.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부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예산이 형편 없습니다. 장관급 회담 한 번 하는데 2억 드는데 1년 동안 북한 인권예산 비용이 450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 비용에 50억이 들었다, 그래도 거기에 비난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 더 그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시고 남북한 군축회담 해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이 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홍 위원님께서 북한의 인권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 군축 두 가지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 임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남북 화해 협력을 이뤄 가고, 나아가서 민족통합을 이뤄 가는 현시점에서 경제협력을 앞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장 평화적이고 우리 국민들도 가장 안심할 수 있고 남북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또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금요일 우리가 개성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남북의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한 건물 안에서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저는 진작 우리가 더 했어야 될 일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작년 6월에 기반공사만 하고 있던 시절하고는 또 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원에벤에셀이라는 회사를 방문해서 그곳의 북쪽 노동자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또 예전에 우리의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메이드 인 개성' 시대를 통해 우리 제조업들,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중국의 높은 파고로부터 경쟁력을 잃어 가던 우리 제조업들의 살 길이 거기에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일례로 신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성 말고도 베트남이나 중국 등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현재 신원은 생산량의 7%를 개성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원은 이미 계산이 나와 즉각 확장공사로 들어가서 내년 중에는 전체 생산량의 20%를 개성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 관리자의 이야기로는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에 비해 한 절반 정도, 생산원가의 50% 정도의 원가가 현재 든다고 그러는데 이제 경의선을 통해 물류비용을 더 절감하게 되고 통관 절차가 좀더 완화되고, 또 지금 지난 7월 미국 상무부에다가 우리 KT가 이미 통신시설에 대한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답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통신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워낙 맨땅에다가 공단을 만들다 보니까 용수나 폐기물 처리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개성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예컨대 무슨 피혁 가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현재 줄을 서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에게는 분명히 스스로 개혁·개방을 주도해 가면서 경제적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것이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생산력,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성은 아주 처음부터 새로 닦았습니다마는 예컨대 북쪽의 청진 같은 데는 예전부터 공업기반시설들이 훨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에 따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으로 경제협력이 확대된다면 이것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 평화와 남북 통합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서둘러야 할 것은 개성공단의 인프라 건설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전력·통신 부문의 대출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2006년도 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는 이것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여유자금에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이 1225억 원 있는데 원래 통일부가 전력·통신에 대한 대출 585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하고, 위치만 개성에 있지 우리 공단이고, 국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고, 산업용 전력은 오히려 가정이나 상업용보다 저렴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산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통신·전력 그리고 직업훈련센터 이런 것 없이 개성공단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처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석 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다른 것보다 시급하게……

지금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북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를 높이면서 우리가 통합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입주 기업들이 늘어날 때 안정적 노동력의 확보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인력 확보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북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군인들이 와서라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입주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개별 기업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지원센터나 직업훈련센터 예산도 반드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이면 벌써 300여 개 기업이, 아마 지금 계산이면 적어도 300여 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바로 들어가야만 우리 입주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기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채무보증제도를 통한 경협 기업들의 자금 대출 지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직접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액수인 400억 원이 올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보완적인 채무보증제도 등을 통해서 보완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3억에서 17억으로 예산이 6배 정도 증액되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정착도우미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이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경찰관이 하거나 또 순수 자원봉사로 했던 것을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가정 방문을 한다거나 같이 지역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양천구나 노원구 같은 데서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름에 복지관에 갔을 때 아주 훌륭하게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후원회가 몇 명의 인원을 갖고 소모성으로 이런 예산을, 그냥 사업을 적는다고 해서 취업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성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만하고 그냥 소모적으로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건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거나 또 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복지관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후원회 설립 당시—7년쯤 되었습니다—그때에는 새터민의 숫자가 한 700명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7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는 후원회 설립 당시에 같은 규모였고, 또 그리고 정착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활동의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정착도우미 사업 또 거주지역별 취업활동 지원, 또 여성들의 부업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학습 쉼터 운영, 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3억에서 17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동안 사실 하나원을 나와서 각자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도움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범사업격으로 7000명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후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주민 숫자가 늘고 있고 그런데 이 후원회 성격에 맞게 기존의 우리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외에 틈새들 또 특수한 일들을 이 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지 그냥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착도우미 사업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이것이 과연 실효적인지, 오히려 이런 예산을 다른 활동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해서 나머지 한두 가지 마무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라고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임종석 위원 이수성 이사장님 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이 공동 회장으로 있는데,

이것이 전경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했는데 아마 기획예산처 예산 방침이 민간단체 신규예산 지원은 불가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중인 북쪽의 민경련, 민경협과 진행 중인 사업 등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위원장 임채정 임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대충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합니다.

통일부 외에 다른 부서에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쓰는 일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일부에서 일정한 검토를 거친 뒤에 예산이 집행되나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 집행과정에서 직접 통일부와 조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종합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퍼주기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단 한푼이라도 섬세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부서가 부서별로 추진할 경우에 올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라든가 낭비적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통일부에서 일정하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해서 토론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른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조사를 하셔서 대북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예산 쓰는 타 부처의 작년도 비용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떤 항목을 썼는지를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같이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또 다른 하나는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느끼는 것인데, 남북협력기금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설명서를 보면 증감에 대한 것이 있지요. 증액되고 감소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왜 증액되고 감액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떤 판단으로 해서 이것은 줄어들었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늘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찾아봐도 없어요. 물론 다른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지출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한 평가를 구성해서 하면서 증액과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다소간에 의문이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정말 평가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점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2005년 사업을 엄정하게 평가해서 그 평가에 기초한 신중한 고려와 계산에 의해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대북 연료 지원, 저도 얼마 전에 잠깐 평양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식량 사정은 다소 좋아진 것 같고—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그다음에 남는 문제가 이제 연료인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연료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네 차례에 5.5만t의 국내산 연탄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한 것이고, 그것 맞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난로 1만 개 지원하고 이랬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입원탄 6만t을 지원할 것이라고 그랬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그것 올해 안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작년에 겨울을 앞두고 북의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개성시민들에게 월동용 연탄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1만t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토지공사에서 지원한 경우도 있고, 또 협력기금에서 직접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 개성의 연료 사정이 평양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열악하기 때문에 개성시민들이 개성공단은 돌아가는데 뭐 좀 개성에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성 사업에 개성시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기 위해서도, 이해하고 또 성원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개성시민들에게 연탄, 그런데 국내 무연탄 수급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으로 봐서도 수입탄을 지원하는 것이 또 가격대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입 원탄으로 6만t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계륜 위원 잘 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면서 조언이라고 할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개성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북한 전체 대북 지원의, 연료 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명료히 세운 다음에, 그것이 평양으로 가든 원산으로 가든 정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그것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연료의 지원 원칙은 어떤 원칙에 맞게 하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구동성으로 나오면서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양도 연료 사정이 매우 곤란한 지역이 외곽에는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좀 원칙을 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그다음에 대북 경협자금 대출에 지금 400억이 들어가 있는데 400억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년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신계륜 위원 지원실적이 들쑥날쑥해요. 2001년도에 450억, 2002년도에 357억, 2003년도에 107억, 2004년에 237억 이렇게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만 놓고는 적절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400억이 많은지 적은지, 더 많이 편성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남는 것인지, 그런 기준을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직업훈련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장관님도 무척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부이고 노동부에서 직업훈련 담당하는 전문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지적도 합니다.

아까 임종석 위원도 지적했지만 북한 노동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물론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킬 텐데 굉장히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봉제 같은 경우, 저도 노동자 생활 해 봤습니다마는 일본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칠 때 북한 노동자들한테 일본 말로 가르치는 이런 문제도 시정을 해서 순화된 우리 국어에서 정한 용어로 가르치면 훨씬 나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볼 때도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노동부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어디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우리는 순수한 말로 쓰고 싶은데 남한 선생님들이 자꾸 일본 말로 가르친다'는 표현을 했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시급하게 통일부가 나서서 노동부와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좋은 지적입니다.

○신계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대학 진학 관련된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중·고등학교는 나이 25세 미만, 대학은 3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이로 제한하는가, 오히려 다른 기준을 갖고 대학을 가서 수강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나이 많다고 대학 못 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준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할머니들도 대학

못 간 한을 풀기 위해서 국내에서 대학 가기도 하는데 기준을 나이로 잡지 말고 적정한 우리 나름의 스탠더드를 정해서 이런 사람은 대학 가고, 이런 사람은 대학 못 가는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나이로 진학 기준을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취업을 하지 않고 생계 급여를 타기 위해서 진학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학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가 북측의 민간경제협력연합회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사료공장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기 2억 48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공장 지원사업은 북한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 생산에 따른 토지의 지력을 향상한다든지 또 북한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서 시장경제로의 유도 등 다양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남북민간교류협의회에 따르면 북측이 사료공장 건물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2006년 7월부터 사료 원료를 지원해야만 사료 생산이 가능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따라서 9억 3000만 원의 추가 재원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교류사업의 다양성과 효율성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대북 사료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의 생각은 어떤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처음에 초기 지원사업은 정부의 협력기금 지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원 요청이 오면 매칭 펀드 방식으로 민간자금에 상응한 정부 협력기금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물론 매칭 펀드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남북민간교류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좀 강조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은 경제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체육행사나 학술 교류, 또 이산가족 상봉 등에 활용되어서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나 직업훈련센터, 그리고 야외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단계 100만 평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300여 개 기업의 입주와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근로자 고용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이러한 센터의 건설에 착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기금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첫째로 개성공단의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초 인프라 비용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활용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센터나 직업훈련센터도 국내에서도 모두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 그다음에 셋째는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국내 인건비 감당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외 이전을 고려했던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직업훈련센터 설립 비용을 기업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공공시설의 착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넣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성공단 전력·통신 사업인데요, 지금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은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사용한다는 점과 그리고 개성공단 전체의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준의 전력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오히려 개성공단에 중소기업들이 입주해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통신 비용을 국내 요금 수준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수준의 전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전력 공급은 시설 투자비가 과다합니다. 그런데 요금은 국내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가정용 요금으로 저렴한 산업용 요금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요금 보전체계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 사정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설 투자비에 대한 장기 대출로 초기 손실의 일정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명숙 위원님께서 개성공단을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걱정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업훈련센터,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전력·통신 시설비에 대한 융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산 당국에서는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성공단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까지는 국내 산업공단에도 이러한 기초 시설들은 일단 정부 지원으로 깔아 주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통신·전력, 훈련시설 지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예산 당국과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당한 사업성 분석하에서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통일부가 판단하고 있는 타당한 사업성 분석, 말하자면 손익과 요금 수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까지 통일부 자체에서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전 내부에서 투자 대비 수익에 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 보고서가 나오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공단이 사실 지리적 특성상 북쪽하고의 통신 수요보다는 남쪽하고의 통신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렴한 요금체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통신산업이 장치산업으로 사실상 규모가 있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규모는 비수익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비가 국내보다 높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아마 KT 같은 데서도 여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사업 구도하에서 통신 사업자가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요금체계의 4배 내지 5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경우 비용 부담은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비용에 대한 대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마 통일부가 같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투자기업 자금 확보를 위한 채무보증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보면 협조대출제도가 협력기금과 일반 금융기관의 지원에 대한 보증이 이중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단계에만 300여 개 기업, 삼사 년 후면 1000여 개, 그리고 공단 개발 완료 시점에 가면 2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기금 대출만으로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면 시범단지의 경우만 하더라도 15개 기업에 5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기금 규모로 북한 투자기업에 대한 기금 직접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 채무보증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에 명시된 지원이라는 것이 채무보증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회계법 제10조제1항을 보면 국가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남북협력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채무보증이 국가의 보증이라면 현행법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근거하고 있어서 시행근거가 희박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법 범주 내에서의 채무보증제도 운영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보증제도가 국가채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통일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도해서 점차적으로 기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대부분 확인된 내용일 텐데요,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4차 6자회담 이후에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았던 북핵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에 관해서 몇 가지 걸림돌이라 할까,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요, 우선 5차 6자회담 개막일은 합의되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위원 열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통일부장관 정동영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일정 조정 회의에서 대개 절충을 했는데 다음 주 중반쯤 개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부겸 위원 북한은 이번에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이라는 요인을 제외하고도 북한이 이 문제로 회의를 기피하거나 이럴 조짐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북으로 봐서도 핵무기 포기와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램 폐기 외에 북이 그동안 간절히 원해 왔고 요구했던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망라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 이행을 북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6자회담에 참여했던 각국도 공동성명 이행 이외의 다른 해결 대안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각국의 완전한 합의하에서 탄생한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이행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지체될 이유는 없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동안 아마 순방외교 등을 통해서 이행 합의에 필요한 로드맵을 서로 합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측도 송민순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고 중국 측도 리빈 한반도대사가 북한 미국 한국을 순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질의 때 미국의 고위급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최소한 양국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서는 한 단계 격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장관님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물리적으로는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5차 회담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방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핵심은 역시 신뢰의 결핍에 있습니다. 특히 북미 양측의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어떻게 골을 메우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고 또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고민이 있습니다.

5차 6자회담에서 각 측의 입장을 솔직히 개진하고 그래서 입장을 확인한 다음 여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행계획을 만들어 내기 위한 추동력은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 대화에서도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된 안이 없다고 보고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행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든 측은 아마 우리가 유일한 것 같고요. 물론 각국이 다 여기에 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5차 회담의 테이블이 열리면 여기에서 각국이 입장을 개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위원 4차 6자회담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경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국의 대표인 힐 대사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는 발언이 있다 등등 당시로는 문서에 도장만 찍었지 사실상 이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정도의 비관적 견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5차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는 것은 적어도 관련 당사국들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진전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대화가 축적되다 보면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교환을 통해서 로드맵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낙관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94년 제네바합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제네바합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봉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 동결 그

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경수로 제공 합의였습니다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자 간의 둘만의 합의였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유관국 특히 4대 강국이 포함된 6자가 모여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고 그 내용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과 한 쪽에 북미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북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지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더구나 거기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이행 이런 미래 전략적 비전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핵문제 해결과 그 이후의 미래에 관한 그림까지를 담고 있어서 94년 합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외에도 상당히 보통의 관측을 뛰어넘는 통큰 지원을 약속한 것 같은데 이것이 혹시 앞으로 우리들이 바라볼 때 적어도 중·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영향력 확대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보도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북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국제사회에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후진타오 주석의 평양 방문과 북·중 간의 정상회담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 외에 유엔 총회에서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 통일부 예산 중에서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새터민 정착 지원 관련 문제, 통일부 역량 강화 문제, 전략물자 반출관리제도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용 위원 예, 저요.

○위원장 임채정 정의용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의용 위원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님께 KEDO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KEDO 분담금이 내년도에는 288만 불로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288만 불은 KEDO 여타 이사국들과 합의된 금액입니까?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288만 불은 이사국들이 공평하게 나눈 기여 부분입니다. 합의된 액수입니다.

○정의용 위원 미국하고 EU가 내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KEDO 운영비를 분담한 그러한 내용입니까?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EU는 현재까지 기여금을 납부해 왔고 금년도 것도 자기네 예산 절차 때문에 그런데 아마 금년 중으로 납부될 것 같습니다. 다른 3개국보다 EU의 몫은 조금 작습니다. 30 30 30 10의 비율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의용 위원 미국이 분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위원 지금 KEDO 사무소의 인력 현황은 어떤가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현재 37~3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기여금이 2년 연속 미납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사무국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감축계획을 만들어서 지난번 비공식 이사회에서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폭 감축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중에 약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직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위원 사업 청산을 위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은 KEDO 사무처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예, 지난번 국감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KEDO 조직이 어느 정도 존속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산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겠습니다마는 길게 보는 사람은 한 2년까지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존속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의 상황을 봐서 연기하게 되면 더 존속시키는 것으로 이사국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경수로 지원 문제하고 연계를 해서 신포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KEDO 조직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중……

○홍준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홍준표 위원님 하십시오.

○홍준표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신포 경수로는 폐기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청산비용이 얼마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크고 실제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계약위반에 따른…… 왜냐하면 계약을 수주했던 업체들이 종료가 되면 계약 위반했다는 클레임, 배상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2억 불 언저리로 1억 5000만 불, 2억 불 이렇게 잠정 추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가와 기술진 전문가들과 함께 청산에 따르는 절차와 비용 규모를 산정해 봐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터빈만 하더라도 한 5억 불짜리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위원 그것이 딴 데 전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터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경수로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이 터빈만 하더라도 5억 불짜리가 더 되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구체적인 것은 장선섭 단장님께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짓기 위해서 3개의 공장에서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두산중공업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일본의 미츠비시 히타치 도시바 이 회사들이 전부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자재에 투입된 총 금액은 약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홍준표 위원 그 세 군데에 투입된 비용이 7억 달러다…… 우선 그게 7억 달러가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신포 경수로가 무산될 때는 들어갔던 비용을 돌려줘야 되겠지요?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현재까지 기성고가 이미 많이 나가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홍준표 위원 7억 불이니까 7억 불 중에 얼마나 나가 있어요?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재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의 경우에는 기성고가 한 90%까지 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50% 조금 상회하는 기성고가 나가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두산중공업도 한 70%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7억 불짜리인데 나가는 것을 다 가정하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2억 불이 넘거든요. 지금 지급해야 될 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이 법률가하고 검토를 해 보면 청산 비용이 2억 불 정도 될 것이다, 즉 터빈 문제만 하더라도 2억 불이 훨씬 더 됩니다. 지금 앉아서 기본적으로 하청업체하고 계약 맺은 것 해지비용하고…… 하청업체가 지금 백열 몇 개이지요?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하청업체는 정확하게 66개입니다. 6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계약 총수가 114개입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계약 총수가 114개인데 그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면 역대 자기들이 들어갔던 비용을 전부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 다 합치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2억 불은 얼토당토않은 금액입니다.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존경하는 홍 위원님 제가……

○홍준표 위원 터빈만 치더라도 벌써 3억 불이 넘어가는 금액이 지급돼야 되고 114개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하고 돌려줄 것을 다 감안하면……

지난번에 KEDO 직원 중에 한 분이—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청산비용이 최소한 10억 불 가량 될 것이다, 역대 한국에서 11억 50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지금 청산비용만 하더라도 한 10억 불 가량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이게 94년도 제네바회담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쪽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는 하나 이때까지 이 정부는 이를 위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매개를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특히 KEDO 경수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미국 측에서 94년도에 경수로 지어주기로 다 합의를 하고 자기들도 비용 부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미국 측에서 그랬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비용을 단 1달러도 내놓지 않았지요?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별도로 했습니다.

○홍준표 위원 우리가 숫자를 보니까 미국이 낸 비용부담은 없습디다. 일본에서 3억 얼마 내고……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중유 비용으로 한 3억 5000만 불 냈습니다.

○홍준표 위원 중유 비용은 냈겠지요. 중유도 나중에 가서 중단을 했고…… 결국 경수로 짓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돈 낸 것은 없다 이겁니다. 한푼도 없지요?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경수로 자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홍준표 위원 경수로 자체는 한 푼도 없지요?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런데 제네바회담에서 경수로 지어주자고 하고 북핵을 동결시키고 한 것은, 사실상 그때 주도도 미국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자기들도 부담하기로 했는데 돈 부담한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도 내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경수로를 지어주면 핵물질 제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폐기처분하는데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데, 지금 벌써 1조 2000억 들어가고 앞으로 청산비용이 1조라면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이거예요. 설득할 길이 없어요. 2조 2000억을 공중에 날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날렸느냐, 그러면 우리가 회담 주도한 미국 측에 나중에 소송이라도 걸어 가지고 돈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미국을 어떤 식으로라도 설득해서 새로운 경수로를 지어주는 것보다 신포 경수로를 완성하는 게 옳다 이것입니다. 미국 주변 강국들 전부 모아 가지고 공동관리체제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핵물질 추출 못하게 해서 신포 경수로를 추진하는 게 옳지 대북 전력 주고 전력 끝나고 난 뒤에 경수로 또 지어주고 그런 식의 북핵회담은 국민의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가중시킨다 이 말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대북 송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수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신포 경수로를 어떤 식으로든, 북핵회담이 타결될 때는 신포 경수로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절차를 강구하셔야지요. 93년 회담 미국이 주도했으니까 미국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부에서 외교 방향을 그쪽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주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요.

경수로단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우선 방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청산비용의 액수 문제인데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KEDO의 누구라고 말씀 안 하시고 10억 불 정도라고 하셨는데……

○홍준표 위원 11억 불로 들었습니다.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지금 장

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 불 또는 그 이하, 액수는 저희 모든 전문가들을 통해서 법률가들을 통해서 모든 계약을 잠정치로 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절대로 10억 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위원 아니, 10억 불이 되든 2억 불이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우선 액수 문제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위원 액수 문제는 그것은, 그러면 2억 불은 그냥 날려도 됩니까?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홍준표 위원 2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2억 불이고 10억 불이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우선 액수 문제를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통일부가 외교부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고 새로운 경수로 해 준다, 그 새로운 경수로 우리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 하던 것, 그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살리는 방향으로 외교를 하고 대미접촉을 하고 6자회담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전부 신포 경수로를 완성하면 공동관리체제로 들어가고, 이것 청산하려면…… 그것 만들어 놓고 흉물스럽게 어떻게 청산할 거예요? 원상복구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방향을 특히 경수로정책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관님, 제대로 좀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잘 알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임채정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장영달 위원, 정의화 위원, 최성 위원, 박성범 위원, 김문수 위원, 이성권 위원, 박계동 위원, 원희룡 위원, 김덕룡 위원, 정문헌 위원, 김부겸 위원, 최병국 위원, 전여옥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 소관 2006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고 이 두 안건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그리고 직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2006년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을 보시면, 총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총액은 130억 4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0.7%인 9600만 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구성의 주요한 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먼저 인건비가 34억 62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인 2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전년도에 비해 3.5%가 삭감된 95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비는 크게 나눠서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자료 4쪽을 보시면 첫째, 내년에는 사업의 중요한 역점 방향으로서 정책 자문기능을 강화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분과위원회는 예년에는 1년에 두 번씩 개최되는 그런 회의여서 그 운영이 형식적이다 하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 온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활동을 내실 있는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 6쪽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 예산입니다. 여기는 지역협의회장 회의 예산과 지역협의회 활동 평가회의, 그리고 유공위원 포상 이런 사업비와 함께 통일시대 기관지 발간

예산 3억 6800만 원 해서 전체 예산이 9억 9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의 주요사업비 예산을 보시면, 먼저 회의 개최 비용으로서 18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회의에 10억 1400만 원, 그리고 해외 회의로서 해외자문위원들을 두 번에 걸쳐 전원 국내에 초청해서 회의를 하는 예산으로서 8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1쪽의 지역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7%인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4억 3700만 원으로써 234개 국내 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27억 4200만 원, 그리고 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6억 5100만 원, 다음에 기획사업비 10억 4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획사업비 내용에는 지금까지는 해외자문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것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뜻에서 내년에 해외 22개 협의회의 활동 예산을 강화하기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 130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6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은 이와 같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해서 예산 범위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다마는 그 사업의 운영 내용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서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년도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안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개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대비 5.8% 증액된 18억 8600만 원이며, 국내 회의는 시·도 지역별 회의 외에 분야별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해외 회의는 해외 현지 회의 대신 국내 초청 회의를 2회 개최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도 자문회의 개최 방식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대표자 회의, 분야별 회의, 해외 현지 회의 및 국내 초청 회의로 나누어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전체 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는 방만한 집행을 부추기고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자문회의 개최 방식에 대한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화상회의와 같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협의회 운영 경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44억 3700만 원으로 2005년도 대비 7%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협의회 운영비는 2005년도 대비 3% 증액된 27억 4200만 원으로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협의회 사업비는 2005년도 대비 6% 증액된 6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사업 예산안은 10억 4400만 원으로 2005년도 대비 20% 증액 계상되었는바, 기획사업비는 협의회 일반사업비와 성질상 구분되는 것은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지역협의회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기획사업비를 일반사업비에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법정회의 운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법정회의 운영 예산안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4회에서 8회로 확대하여 2005년도 대비 160.4% 증가한 48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는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2005년도 대비 22.6% 감소한 5300만 원으로, 분과위원회는 총 20회에서 100회로 확대하여 2005년도 대비 160% 증가한 2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편 취지는, 남북관계 주요 현안 발생 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정책 자문 기능을 활성화 하여 법정회의를 실질적인 자문건의안 도출 시스템으로 활

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속도로 심화 발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정회의가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하는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회의체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체계적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임위원회 축소 운영으로 인해 자문 건의의 대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처 직제 개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麗玉 委員 민주평통은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고, 지금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군데군데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민주평통 사무처의 2006년도 예산안을 곰곰이 본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민주평통이 도대체 무엇하러 있나, 박성범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한나라당에서 민주평통폐지안을 냈는데 이런 민주평통이라면 정말 국민의 세금을 필요 없이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분과위원회 현황이나 분야별 회의를 저희가 볼 때, 분과위원회가 연 20회에서 연 100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를 늘리면서 자문활동이 활성화 된다, 이런 것이 기대된다는 것도 지금까지 분과위원회가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이고.

이번에 분과위원회 분야별 회의 2005년도 참석률을 보니까 기껏해야 50%, 55%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회에서 100회를 무슨 근거로, 이것은 이제는 그러면 10% 20%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90%라든가 100% 출석을 해야지 회의를 늘리는 것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회의를 늘리고, 회의가 많은 조직이라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더 기가 막힌 일은 이번 분야별 총예산이 무려 4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회의 준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직에서도 나올 수 없는 여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통비만 봅시다.

교통비 2만 원에서 200명 해 가지고 90%에서 곱하기 20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90%가 됩니까? 더구나 이것이 50% 정도밖에 이제까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회의는 이렇게 더 늘고. 그리고 이것을 다 떠나서 보통 조직, 회사면 아무리 많이 잡아야 70%로 잡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 더 많이 받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여비에서 이런 식으로 남겨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70%로 잡아도 말이 될만한 건인데 왜 90%로 잡았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이번 12기부터 인원수를 대폭 줄이고 그 전문성을 강화해서 출석률을 높이고 내용을 확보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각 분과위원회마다 20명 전후로 만들고, 전에는 그 분과위원회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내용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기로 정하고, 그래서 그 출석률……

○田麗玉 委員 아니, 잠깐. 횟수를 늘린다는 것이 내용 있는 회의를 한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구나 제가 물어본 것은, 교통비라든가 숙박비·식대에 대해서 왜 90%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조직에서 회사에서 다 70%로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사람도 안 와 가지고 2005년도 분과위원회 분야별 참석률을 보면 많아야 50%, 밑바닥인데 여기에 대해서 90%로 올린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예산을 국회에다가 해 달라고 그럽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식하다고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산을

특별히 내년에 증액해서 더 따기 위해서 만든 안은 아니고요. 예산안……

○田麗玉 委員 그러면 50%로 해야지요. 이제까지 나온 참석률에 대해서……

2005년도 분과위원회 분야별 참석률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90%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90%가 온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여기 소수의 모임으로 내용을 확보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데, 목표를 좀 과도하게 잡은 것은……

○田麗玉 委員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시·도별 지역회의에서도 충분히 자문활동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1박2일 무료로 연수를 하면서 분야별 모임을 개최하고 90%로 올린 것까지는 되겠는데, 도대체 이렇게 실비를 줄이고 또 참석률을 올리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평통이……

그동안 민주평통이 존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장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주평통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뭔가 깨끗하고 뭔가 투명해야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그 지적……

○田麗玉 委員 더구나 1박2일 같은 무료 연수까지 시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회의의 내용은 무보수 명예직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그야말로 실비의 회의 내용입니다.

2만 원이라는 것은 수도권 참석 위원들의 교통비를 실비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田麗玉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교통비 2만 원이……

수도권에서 뭘 2만 원씩 듭니까? 수도권인데, 지방이면 모르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수도권은 이제……

○田麗玉 委員 서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교통비, 숙박비, 식대, 직원 및 강사 숙박비·식대·여비, 회의 음료대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비용만 해서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거의 3억 원 가까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실비입니까? 실비라는 것은, 말을 잘못 쓰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올해 상반기에……

지금 질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통과 못 시킵니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24개 통일문화특화사업의 유형 가운데 보니까 노래자랑 공연이 전체 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통일문화특화사업도 이런데 지금 무슨 분야별 회의에서 어떻게 퀄리티(quality)를 높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도 노래자랑으로 50%를 할 정도인데 회의에서 무슨 특화를 하고 무슨 질을 높이냐고요.

지금 통일만화 같은 것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이상한 만화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민주평통은 오로지 문제·사고 다발하는 것이 민주평통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통일문화 특화사업에 무슨 노래자랑 공연이 전체 사업의 50%로 들어가면서 무슨 회의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업과 직능별 사업을 저희들이 형식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개 문화사업으로는 지역단위로 협의회에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분야별 회의라는 것은 직능별 회의를 말합니다. 교육계·경제계·의료계 이렇게 참여 자문위원들이 직능별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행사와는 다르고……

○田麗玉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 분야의……

○田麗玉 委員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장께서?

제 얘기는, 회의라는 것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 전문성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 400명씩 200명씩 모여 가지고 한꺼

번에 20명이 한 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논제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해도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비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 몰아넣고, 90%로 올리고, 이것은 예산을 더 따먹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통일문화 특화사업 같은 것은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하나 못하면서 노래자랑하고 그것 갖고 50%를 채우면서 무슨 회의에서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논제를 제시한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통일문화 특화사업 해서 이런 것으로만 하는데, 여기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업이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지역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지역에서 협의회별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잘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올해 특화사업 조차 신청하지 않은 데가 해외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나 됩니까? 아예 무시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해봤자 소용없고 우리 그런 것 아무 흥미도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일곱 군데서 이렇게 아예 특화사업을 신청조차 안 했겠어요? 그렇게 좋다면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률이 오히려 치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256개 협의회에서 일곱 군데 정도가 접수가 안 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 협의회에서, 대다수 협의회에서 많은 계획들을 구상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처장님, 이것 보세요. 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싫다고 한 것이면 민주평통이 얼마나 허술하게 일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해외 지역협의회에 활동지원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4년도 결산 내역 중에서 지원액이 약 3%라서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주 일부 지역에서 저희 의원실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즉 친북 인사들이 행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민들이 이 민주평통에서 지역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강사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올라 왔습니다.

이런 일도 삼가하시고, 어쨌든 이번 예산소위에서 여러 가지를 체크할 텐데 민주평통에서 올린 것,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지도 마시고 이런 것 통과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이번 제12기 들어와서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전임 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아직은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7월 1일에 출범해서 대개 지역협의회는 정기 회의를 분기 1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회의를 하고 10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통계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성은 11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처장님, 존경하는 전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대접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지난번 12기 개편 때의 그런 노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십시오.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문회의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에 관한 여론과 그분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함일진대 그러면 회의를 잘 조직하고 그분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분들이 또 거기서 합의되거나 논의된 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마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옳다면 이번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그만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확실히 요구를 해 주세요.

우선 국내 234개 지역협의회에 월 100만 원 정도 지원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90만

원에서 115만 원 사이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가지고는 사실상 사무실 유지비용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여직원 급여로 대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 유지가 사무실 하나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들의 커뮤니티일 텐데 운영할 만한 최소한의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찬조를 받거나 혹은 재력이 있는 자문 위원들께서 아마 기금을 갹출해서 운영하는 방식일 텐데 그것도 그나마 대도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년 경우에 보니까 자체 예산을 그나마 확보를 못한, 지원 금액을 한푼도 못한 데가 100 군데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사업비로 운영하는 예산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자문위원들이 스스로 내는 회비가 군 단위 소규모 협의회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구가 정말로 존재의 이유를 확보하려면 투자할 곳은 분명히 투자를 해서 조직이라는 것이 최소한도 자기 활동을 해야 할 텐데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협의회 자체 예산을 최소 확보한 지역은 54만 원을 한 지역이 있어요. 그나마 대도시를 보면 서울시 경우에는 9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이 범국민적인 통일에 관한 에너지를 모으는 기구로서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현실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취약 지구에는 어떻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형편이 나은 지역에는 형평성 시비가 있더라도 다른 데로 돌리겠다든가 이런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역 회의에도 보니까 회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지역 회의에도 매달 1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기에 적어도 한 지역 회의에 과거에 50%, 이번에 한 70% 정도 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면 사실은 회의 자체 경비로도 턱 없이 부족한 돈 아닙니까? 장소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정확하게 이 조직이 자기 존재의 이유를 가지려면 이것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고 요구를 하고, 그 대신에 아까 지적한 부분 중에서 과거에 해 보니까 이것이 형식만 남았지 내용이 없는 것은 과감히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 회의에서 16개 시·도지사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이 기구가 전국 규모의 기구입니다마는 실제 상황은 광역 시·도 단위의 기구가 여태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구의 효과를 앞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광역 시·도 단위의 기구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비를 시작해서 몇몇 지역에서 사무실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남 지역 회의, 전북 지역 회의, 인천 지역 회의 이곳에 사무실이 개소되고 예산 지원이 시작되고 있고, 연내로 16개 시·도 중에 절반 정도 사무실과 예산 지원, 인력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석부의장님이나 사무처장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했고,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분들은 특별히 이 기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한다거나 이런 지적을 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신 것이 없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광역시장님들이나 도지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것을 도 단위, 시 단위에서 활성화하는 노력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계시고,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 또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임채정 위원장, 임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부겸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앙 부처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설득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도지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당 지역 자치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지원에 대한 설득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테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에는 더 달라고 하고, 또 그동안 그냥 명목만 존재하던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정말로 12기 출범 이후에 뭔가 달라진 평통이 사업이나 면모가 일신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委員 민주평통의 예산 편성을 보면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인건비가 4분의 1, 사업비가 4분의 3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거의 99%가 회의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습니다. 회의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민주평통의 본래 설립이유나 존재의 근거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능이지요? 물론 여론도 수집하고 하지만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참고자료 14쪽에 보시면 법 2조에……

○崔炳國 委員 내가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래서 그런 자문 건의를 위해서 통일 여론을 수렴하는 일도 하고 국민적……

○崔炳國 委員 통일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라는 기능도 있는데……

○崔炳國 委員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통에서 무슨 주어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모든 국민들이 따라오게끔 여론을 집약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건의한다, 정책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주요한 국민적 관심사들에 대해서 토론을……

○崔炳國 委員 통일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崔炳國 委員 통일정책자문회의 하는 비용이 27억입니다. 21.3%이고요.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통일의지 역량 결집 그래서 회의 해 가지고 54억, 41% 되는데요, 이런 회의를 한번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통일의지를 집약했다든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데 필요했다든가 이런 평가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모든 회의에서 정책 건의안들을 집약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회의 한다고 사람 1000명씩, 2000명씩, 심지어는 몇천 명 모아놓고 전체가 1만 7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것 모아 놓고 거기서 무엇을 도출합니까? 도출이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말씀하시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분과위원회는 보통 20명 규모의 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것은 10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래서 평통은 진짜로 형식적인 기관이고 국가 예산만 쓸데없이 낭비하는 아무런,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 없는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 운영비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한 협의회에 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사업비에서는 통일문화특화사업 중에 매년 30개 정도를 선택해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30개 정도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선정을 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전국협의회에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 형식과 비슷하게 응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 있는 사업이 어떤 것

이냐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또 기획사업비로 평화통일포럼, 지역화합 문화한마당, 청년층 자문위원 커뮤니티, 해외 통일여론 수집 이런 데도 사업비를 지원하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기획사업은 직접 평통에서 지원하지 않고 직접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단체를 임의적으로 규정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이럽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지원합니다. 저희들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에서 응모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면 그 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崔炳國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역화합 문화한마당, 2030자문위원 커뮤티니 이런 것을 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중에 2030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들은 각 시·군 단위별로 계획을 제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런데 이런 평화통일포럼이니 지역화합 문화한마당 이런 것은 직접 평통에서 주최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런 단체에 돈을 보조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단체가 아니고 저희 기구 안에 있는 지역협의회입니다.

○崔炳國 委員 그러면 2030지역협의회 이렇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2030은 각 16개 시·도별로 젊은 자문위원 모임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崔炳國 委員 이렇게 내가 묻는 것은 평통이 자기 본래의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3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남북 나눔공동체 설립 현황, 독도 문제 등 대일 관계에 대한 건의안, 독도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평통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하고 평화통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영토 문제에 관한 것이고 또……

○崔炳國 委員 영토 문제하고 남북통일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영토 문제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崔炳國 委員 지금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하는데 이 독도 문제가 남북한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통일 국가의 영토에 관한 것이고, 또 한일 관계 이런……

○崔炳國 委員 그런 쓸데없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평통은 통일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인데 독도, 물론 한일 간의 문제입니다마는 독도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평화통일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통일 관련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의 설문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필요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견해, 6자회담 전망,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대한 적대국은 어느 국가냐,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이 있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한 적대국가는 미국이다, 북한은 무력침공의 가능성이 없다,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

글쎄요, 물론 남북관계니까 이런 것은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런 문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유도하는 것입니다. 의식화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자, 북한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 탈북자가 생긴다, 국군포로가 어떻다, 납북자라든지 정치범 수용소 이런 것은 일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런 것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북한과 통일하자고 하는데 북한 실상을 알리려면 이런 것도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설문은 많은 항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로 드신 것은 자료 제목에 해당하거나 주요한 항목만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설문에는 아주……

○崔炳國 委員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있

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것 공표도 안 했지요? 못하고 있다가 말이 생기니까 슬쩍 흘렸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무슨 말씀이십니까?

○崔炳國 委員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표해 본 적 있습니까? 공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발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많은 내용들은 대개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모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항목을 계속해서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를 하는 내용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통일만화공모전이나……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됐지요? 입상작 선정한 것이 반통일세력 미국 등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통일만화였고 통일지상주의 그런 것이 금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통이 본래의 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소위 좌경의식화교육이나 하는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면 평통의 존재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평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에서의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미친북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이 입상작이 되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돈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평통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통 예산의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문에 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여론 수집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대개 21.5%입니다. 21.5% 이외의 비용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반미 친북 교육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의 활동과는 관계가 먼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만 7000명의 위원들이 모두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정당에서 참여하고 있고 어떤……

○崔炳國 委員 지난번에 만화 공모한 것 안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통일세력이 어디냐고 할 때 미국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 만화를 감상하는 방법의……

○崔炳國 委員 방법에 따라 눈에 보이는 빨간색도 파랗게 보이고 그렇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지적하신 내용은 만화의 전체적인……

○崔炳國 委員 됐습니다.

평통 사무처장의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 지금 민주평통의 예산안을 보니까, 민주평통이 움직이는 내부의 인건비와 사업비라는 것도 보니까 기본사업비도 전반적으로 그렇고 주요사업비도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조직을 자기 스스로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왜 이런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더 많은 사업을 냈는데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것인지……

1만 7000명입니까? 그 조직을 겨우 관리하기도 급급한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 사정이냐 아니면 내부의 창의적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알 수가 없는데요.

자문위원 1만 7193명의 선정에 대한 논란도 있고 공정성 시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직능대표는 1만 1588명으로 67.4%입니다. 저희 지역구나 선거구의 경험으로 볼 때 직능대표가 과연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인가, 또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사인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요. 직능대표 중에서 관점의 차이를 떠나서 가치관을 떠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

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대개 상임위원으로 구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의 규모는 대개 500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상임위원 중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수라든가 통일 문제 관련되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중 50% 가까이는 지역협의회 회장이고 50% 정도는 전문가들인데 약 200명 남짓은 학술 연관이 있는 연구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계륜 위원 제가 볼 때는 나머지 200명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업내용이 빈약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부의 전문 역량과 전문 조직들과 주변의 채널을 높고 낮은 수준으로 잘 조직해서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부겸 위원도 질의와 지적을 했지만 지역협의회 지원액이 운영비가 올라서 월 9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평균을 계산하면 그렇게 소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90만 원에서 115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협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러면 운영비 말고 사업비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있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사업을 신청해서 채택된 협의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신청해서 승인 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비가 매월 100만 원 정도 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비가 그렇습니다.

○신계륜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도 재력 있는 회장이 1000만 원 내고 2000만 원 내고 3000만 원 내고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액수를 제시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돈 좀 얻어 쓰려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눈치나 보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곳은 올라가야 되고 내릴 곳은 내려가야 됩니다. 보니까 아무 공감 가는 대목이 없어요.

그다음에 기본사업 중에 간부위원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부위원 활동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문위원 중에서 간부위원을 말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간부위원들은 16개 시·도 부의장하고 10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사, 이렇게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간부라고 부르고 그분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에서 15만 원 활동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것 참 애매한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간부위원이란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16개 시·도의 부의장이 열여섯 분 있습니다. 그 부의장하고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의 열 분의 위원장하고 열 분의 간사 이렇게 36명이 30만 원에서 15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대상들입니다.

○신계륜 위원 16개 시·도 위원장한테는 지원이 안 되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부의장이 대표입니다.

○신계륜 위원 부의장이 대표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의장이 현직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16개 시·도의 부의장은 그 지역을 대표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지역협의회도 부의장으로 말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광역 시·도를 부의장이라고 합니다.

○신계륜 위원 좋아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 편성으로 볼 때 민주평통은 내부 회의만 하는 회의비용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견해

를 수렴해서 대통령에 자문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신계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이번에 자문회의 전체 인원수가 얼마로 늘어났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1만 71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여 명 증원이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해외까지 다 포함된 숫자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평통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 같은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민주평통자문회의의 발전방안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최근 2년 안에는 없었고 그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상임위가 발주를 해서 외부에서 용역보고가 되어 있는 게 수년 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한 1만 7000～8000명의 지역협의회를 포함해서 자문회의가 해외에까지 이렇게 많은 역량들이 집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빌라이즈시키면 굉장히 좋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역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역협의회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번에 지자체나 도의원들이 자문회의의 당연직으로 되면서 지역협의회 사무실하고 지자체 사무실을 겸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 실정이 어떻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대다수가 시·군·구 관공서의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제에 평통자문회의가 귀속되어서 죽도 밥도 아닌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우선 시·군·구 협의회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내부에서 몇 차례 논란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금 공식적인 해석은 2년 전에 행자부가 이것은 정부 기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NGO처럼 민간시설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현재까지 그런 방향으로 흘러 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사무실을 지자체에 얹혀서 겸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사업 자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 역량 자체도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이 가볍게 나타나지만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밀착되게 되면 민주평통자문회의가 도무지 뭔지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협의회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을 통한 자문건의 역량 제고' 이러한 제목으로 5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보다는 감소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자료제공 내용을 보면 자체 발간한 잡지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발간한 남북교류협력 동향이라든지 국정원이 발간한 최근 북한 동향이라든지 또 민주평통이 발간한 통일시대라든지 이런 자료가 제공이 되고 또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자료로서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문위원의 자문건의 역량 강화

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료제공 형태의 소극적인 사업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편성된 5300만 원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판단이 들고 오히려 자문건의 역량 강화를 위하는 목적이라면 자문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뭔가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문건의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을 건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나오는 잡지 보내주는 것으로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자문건의 인센티브제도랄지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연령적으로 고령층 젊은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구성인데 그중 젊은이들은 여러 좋은 연구소들의 최신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령층 자문위원들의 경우 해외를 포함해서 이런 책과 잡지 형태의 여러 가지 자료들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유효한 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으로는 사무처 직제개정과 혁신관리 평가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사무처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월에 직제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을 종전의 국·과 체제에서 팀제로 개편을 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한명숙 위원 이 조직개편을 한 결과 의사결정 단계의 축소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평가할 만 합니다. 그리고 팀 중심의 업무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이런 것들도 평가하고 업무중심의 조직으로 설계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적과 역량평가를 위한 성과관리나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못해서 공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의 조직체계 변화를 통한 혁신시스템 구축 노력은 평가하지만 혁신관리계획이라든지 혁신관리 평가를 상호 연계해서 혁신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지 못하면 오히려 개편을 해 놓고 혁신 계획과 관리평가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조직 내부의 괴리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성과 지표와 목표를 중심으로 사전에 그리고 과정에 성과를 연계하는 입체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혁신과제와 혁신역량, 다시 말하자면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학습성과 관리 이렇게 구분해서 핵심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주평통이 앞으로 이렇게 혁신을 하는 데 비전과 혁신체계 구축에 대한 대책을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은 개편 초기여서 큰 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인 평가 그리고 팀 평가를 세부항목으로 계량화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인사와 성과급 지급 이런 것들이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개의 평가가 종합될 수 있는 체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평통의 조직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편입되는 형식으로, 의존되는 형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정체성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상임위 열릴 때마다 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의 대체로 비슷한 의견에 강도 높은 비판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또 답변하시고……

여담입니다마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평통이 해체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현재 건재한 것으로 봐서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통이 '그럼 그렇지, 그냥 야당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과성으로 넘겨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듭니다.

저는 정말 굴욕적 느낌을 갖고 말 그대로 이 평통을 새로 출범시킨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처장님 답변을 듣고 또 맨 처음 뵙고 오늘 이러면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혁신 처장님을 자처하시고 오셔서 초반에 정말 원기 왕성한 20대의 의욕을 보이셨는데요.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평통이 '혁신, 혁신, 혁신' 운운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내용적이고 질적인 발전이 수반됐는가, 오히려 사업의 방향 전환만 이루어지고 본질적인 변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요즘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 좀더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너무 방만한 사업을 하게 되면 잘한 일도 묻혀 버리고 또 통일부도 감당하지 못 하는 일을 평통이 하는 이런 상황들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오늘 2006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조금 기분 상할지 모르지만 통외통위를 무시라도 하시는 듯 어마어마한 방만한 사업을 벌여 놓으신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사실 어떤 것을 좀 변호해 드리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의 제기 이후 어떻게 수정 보완될지 모르지만 한 번쯤 여야 위원들이 제기했던 평통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물론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또 지나친 비난성 비판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합리적 비판의 핵심은 수용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부분은 미해결했고 어떤 부분은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적절한 시기에 보고해 주는 것이 그래도 평통이 여야 위원들로부터 좀 온당한 평가를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역협의회 관련 예산 비용은 우리 신계륜 위원님과 한명숙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평통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에 친위 조직화하는 평통의 모습이 아니라 지자체에 종속화 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든 야든 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장,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전반적인 평통 위원들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협의회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그것이 과도기적으로 어렵다면 당연히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협의회 활동 내용이 대단히 잘 하고 있는 데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평통 상임위에서 국제위원회 이야기가 나왔고 또 재외동포사회의 연계 활동, 차세대 네트워크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외동포재단에서도 하고 있지만 세계 한인경제인들을 묶어 내고 세계 한인들을 온라인상으로든 오프라인상으로 엮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에 이를테면 관변단체에 어용화되는 데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평통 위원의 경우는 최대한 잘 관리를 하고 또 새롭게 영입된 해외 평통 위원들은 잘 관리해서 정말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보수적인 분은 보수적인 분대로 진보적인 분은 진보적인 분들대로 조국에 대한 열정들을 느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계 한인 네트워크 마련에 좀더 많은 예산과 좀더 많은 정보 예산에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미국의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차세대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충 제안식이고요.

그다음에 2006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봐 주시면 20페이지에 직원 교육 훈련 교육비, 직원연수 이런 비용들이 나와 있는데 과거나 지금 보면 물론 민간위탁 교육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직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좀 신명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얼핏 봐서는 그냥 일반적인, 특별히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라 좋은 의미에서 직원들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평통이 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내부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도 오랫동안 학계에 있었고 또 여기 저기 기고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33페이지에 보면 '통일논의 리뷰'가 8800만 원이고 34페이지 여론조사가 9300만 원, 만화공모전이 4500

만 원, 46페이지 '통일시대'의 발간, '통일시대'는 뭘 말하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월간 기관지를 얘기합니다. 월간지입니다.

○최성 위원 거기에 2억 4000이 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월간지로 1만 7000명의 자문위원과 약간의 유관기관……

○최성 위원 그런데 이 '통일시대'는 1만 7000명의 위원들한테는 보내는데, 우리 통외통위 위원들한테는 보내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보내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제가 못 보고 있나 보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통일논의 리뷰'하고 '통일시대'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다음에 자료제작 3000만 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시다시피 통일연구원에서 수백 종의 책이 나오고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유수한 기관에서 엄청난 잡지들이 나오는데 이런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공개적인 자문, 때로는 필요하면 비공개,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또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또는 국민화합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청취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는 것이 실제로 평통의 목적의식에도 맞지, 과연 이 많은 책자와 방대한 논문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54페이지에 보면 혁신포럼 운영, 혁신워크숍, 혁신평가가 나오고 '혁신, 혁신, 혁신' 그러는데 여당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혁신해야 되지 않는가, 무엇을 혁신하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혁신포럼, 혁신워크숍 뭐를 혁신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한때 개혁 피로증 논란이 나왔지만 정말로 혁신 피로증, 이런 게 제기되지 않도록 평통이 때로는 억울하고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겠지만 제가 들어볼 때는 하나의 문제, 감당하기 힘든 일을 평통이 너무 방만하게 하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그것이 축소되거나 선택,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내지 못하고 개선해 내지 못하면 정말로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주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제안과 비판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처장님의 총괄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위원님께서 몇 차례 거듭해서 사업이 너무 여러 종류에 걸쳐 있고 또 잘게 쪼개져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각된 사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여러 차례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5월에 다음해의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의 대폭적인 조정과 새로운 설계를 위해 그동안 근본적인 작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기가 진행되면서 내년도 5월에 제출되는 다음 사업 설계에서는 그것이 좀 근본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강조해야 될 그런 사업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성 위원 잠깐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우리 처장님께서 좀더 현명하셨다면 저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위를 거쳐야 되고 저희들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그 이전에라도 저는 이런 사업의 선택·집중과 관련해서 상임위의 개별 위원들에게 또는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부분이 빠졌으면 좋겠는가, 설령 그것이 나중에 수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와서 다시 내년에는 또 다음번에는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무리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일만화공모전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을 들이는데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게 뭐 있겠습니까? 음악, 미술, 만화 다 중요하지요. 문화예술·체육 교류…… 그런데 이런 경우 꼭 평통이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물론 제가 이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론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평통의 여론조사, 상임위 할 때나 대정부질문 할 때 좀 활

용하려고 보지만 일단 평통이 갖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우 과감히, 이러니까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의미 있는 쪽에 설득을 해서 참여를 하고 또 여기 있는 여야 위원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평통 사업에 해당이 되면 그것을 과감히 수용해서 넣으면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처장님께 이후에 반복되는 문제 제기는 가급적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 위원 평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상 평통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하게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통의 설치 목적은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대해 자문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김혁규 위원 그런데 자문을 한다는 것은 전문지식과 전문인들이 모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통령에게 통일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건의하는 것이 자문에 응하는 것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런데 이 기구는 처음에 설계할 때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범할 때 이미 8000명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김혁규 위원 우리 헌법에 8000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1기에 800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김혁규 위원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린 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혁 개혁', '혁신 혁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 최성 위원 말씀과 같이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단체, 또 통일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관, 그리고 연구소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통이 좀 자체적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자문을 하는 그 원칙적인 목표를 위해 좀 대대적인 인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석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인적 구성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여러 차례 내부 논의와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그 활동 내용의 효율이 어떠냐에 대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내세울만한 효율을 얻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들이 나와서 그것을 새롭게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들이 내부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평통이 소위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자문을 응한다면 구태여 시·군·구까지 지역협의회를 만들고 그 부대를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하다못해 광역 시·도 단위로 평통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인적인,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개혁과 혁신을 해 나가야 되지, 사실 시·군·구 평통 멤버들 보면 전부 동네 유지들이에요.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런 조직을 계속 국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끌고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평통에 대해서는 개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도지사 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지역 평화통일협의회가 사실 국가기관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김혁규 위원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김혁규 위원 그러면 그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모든 운영 경비와 사업 경비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원칙적으로 보면 국비로 예산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부담을 중앙에서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법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 자문위원 그리고 지역협의회 회장 인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협의회 예산을 확보 안 해 주는 것은 법률 위반이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김혁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단체장들 중에 일부 반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다시 확인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당장 변경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지금 지방의 현실은 말입니다, 시·군·구 협의회 평통위원들 또 간부들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하나의 종속된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타야 되니까, 예산의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비위를 거스르게끔 행동을 하다가는 돈이 안 나온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지역협의회 회장 그리고 자문위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여당 쪽에 기울어진 회장이 협의회 회장이 되니까 야당 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저 사람은 선거에서 나에게 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니까 운영비 보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문제를 평통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대통령을 위한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인지, 안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하수기관으로서 선거에 도움 주는 단체인지 헷갈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문제를 평통사무처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고쳐 나가야지요. 이것이 하나의 개혁 과제 중에 큰 과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지방정부와 그 독립적인 자기 지위를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그 예산도 국비로 적립되어야 된다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규 위원 그런데 사무처에서 볼 때 시·군·구 평통협의회가 우리 통일에 자문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문에 도움을 얼마나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 통일정책에 자문을 준 실적을 말하라고 그러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지 싶은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24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통일정책을 국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하는 나름대로 기능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그렇게 기여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논점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혁규 위원 저는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려면, 창출하려면 역시 전문인들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평통 설치 목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통위원회의 모습과 설치 목적과는 상당한 갭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일단 시·군·구 지역협의회 설치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곳도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요즘 앞으로 분권화 시대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완전히 구분되어 가지고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기조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통 중앙사무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들 계십니까?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麗玉 委員 아까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평통이 관변 단체나 어용단체……

이것은 털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평통이 어용·관변 단체 비슷하게 출생을 했지만

이것은 털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정상적인 그런 국가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田麗玉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 평통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田麗玉 委員 그런데 왜 평통에서 이번에 자문위원들을 모집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에 부응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평통은 참여정부와 더불어서 무조건 끝나게 되는 것인가요?

이제까지 관변·어용 단체로서 평통의 출생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때도 어떤 특정한 정부의 이름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참여정부를 거기에다가 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참여정부의 통일정책과 그 이전의 정부……

그냥 통일정책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평화번영정책은 지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그런 대립적인 여러 견해를 이제 보다 통합적인 기능을 앞으로 살리겠다는 그런 기조에서……

○田麗玉 委員 그러면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갈등 정부였습니까?

참여정부는 통합 정부이고, 그전에 햇볕정책으로……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갈등 정부였습니까? 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실제로 그런 햇볕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의견의 대립이 파생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합적인 기능을 강화해 간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田麗玉 委員 어떤 점에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갈등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한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각이 되고 많은 국민들의 견해 차이들이 노정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田麗玉 委員 그것이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탓입니까? 갈등을 야기시켰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러한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렇다면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야기시켰다 이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어떤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그런 부수적인 영향과 그런 현상들이 파생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햇볕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정부의 평화통일정책, 번영정책에 부응하는 자만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조건을 그렇게 해서 거셨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田麗玉 委員 그런 의미가 왜 아닙니까?

지금까지 갈등을 야기시켰고, 그런……

특히 6·15선언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인 분이 그렇게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몰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그러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여기 자문위원……

○田麗玉 委員 그렇게 비전문적인 분이 처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자문위원……

○田麗玉 委員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지금 본인 말로 다 수긍하고 긍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니까 여든 야든 민주평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여당의 위원들께서도 기가 막히셨을 것입니다. 처장이 이 정도로 통일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1년에 130억을,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주어야 됩니까?

130억이면 단전단수 가정을 1년을 한 마디로 수돗물 흐르게 할 수 있고 전깃불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의화 위원, 김덕룡 위원, 원희룡 위원, 이화영 위원님 등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의 증감 규모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외교통상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영길	김덕룡	김문수	김부겸
김혁규	박계동	박성범	신계륜
신기남	원희룡	유선호	이성권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전여옥	정문헌	정의용	최병국
최 성	한명숙	홍준표	

○출장 위원(1인)

정의화

○청가 위원(1인)

김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	김성원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이봉조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혁신재정기획실장	홍양호
정책홍보실장	이관세
정보분석국장	김남준
교류협력국장	김천식
사회문화교류국장	고경빈
통일교육원장	신언상
남북회담사무국장	황하수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김희택
제1정책기획관	김영구
제2정책기획관	김두권
제3정책기획관	오세정
운영기획팀장	김점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남북이산가족교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최성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2 최성·유선호·이영호·강혜숙·최인기·정청래·안민석·황우여·이미경·김성곤·정의용·장영달·한명숙·임종석·이화영·권영길·정의화·신계륜·김혁규·김원웅·김한길·민병두·김재홍·이광철·강창일·노현송·배기선·김동철·제종길·김영주·김현미·이강래·김효석·이낙연·주승용·김부겸·노웅래·윤호중·장경수·우윤근·김교흥·이기우·노영민·우상호·강기갑·신기남·안상수·김태홍·엄호성·이해봉·박명광·정문헌·원희룡 의원 발의)

10월 13일 회부됨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3 장경수·양승조·강창일·강혜숙·김태홍·이호웅·이미경·정봉주·이영호·유선호·박계동·노영민·배일도·김동철·조경태·박상돈·안상수·윤호중·이시종·이근식·김한길·김우남·양형일·김재홍·박기춘·서갑원·황우여·김원웅·이석현·우제창·장복심·류근찬·김학송·박명광·이인기·이강래·제종길·서재관·김애실·지병문·이종걸·김영춘·김낙성·임종

인·이혜훈·이광철·신상진·김재윤·정청래·이화영·조정식·김춘진·노웅래·최성·이영순·김태년·최재성·최순영·강기갑·단병호·백원우·홍문표 의원 발의)

10월 14일 회부됨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4 송영선·엄호성·정병국·박세환·권경석·고조흥·박진·이상득·황진하·김용갑·이강두·황우여·최연희·김성조·장윤석·김재경·정희수·김문수·정의화·홍준표·최병국·정문헌·김희정·신상진·고경화·김정권·정두언·이병석 의원 발의)

10월 18일 회부됨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일본군위안부·사할린억류자·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촉구결의안

(2005. 10. 18 유기홍·최성·이근식·신기남·김태홍·이계진·노현송·문학진·김형주·이화영·정봉주·임종인·이영순·김선미·한명숙·제종길·김영주·이인영·조배숙·이원영·윤원호·한병도·백원우·최재성·김종률·최순영·배일도·심재철·김태년·강혜숙·엄호성·이목희·지병문·채수찬·이상민·김성곤·안민석·박명광·이강래·김재윤·강창일·우상호·장향숙·장복심·정청래·김희선·김원웅·황우여·신상진·이혜훈·김재홍 의원 발의)

이산가족재회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9 이은영·강창일·권영길·김애실·김춘진·문학진·민병두·배기선·배일도·우원식·이계안·임종인·장영달·최순영·홍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0일 회부됨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5 이성권·김석준·박형준·김명주·권철현·정화원·김희정·김양수·이계경·남경필·김무성 의원 발의)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지지 결의안

(2005. 10. 26 최성·이시종·송영길·우상호·김효석·김종인·이강래·선병렬·정성호·박영선·조경태·정장선·문석호·최용규·오영식·조정식·한병도·김혁규·장향숙·임종석·정의용·신계륜·유선호·김원웅·민병두·배기선·김영춘·김낙순·이상열·김영주·박명광·고진화·강혜숙·배일도·엄호성·강기정·염동연·백원우·유시민·김태홍·권선택·권영길·이원영·윤호중·손봉숙·천영세·정청래·노현송·강창일·이영호·최인기·김희선·김태년·신중식·이근식·김종률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7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의 UN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2005. 10. 31 나경원 의원 외 126인 발의)

11월 1일 회부됨

○청원 회부

일본내 조선인마을 우토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청원

(2005. 10.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B/D 6-8층 법무법인 정평/우토로국제대책회의 상임대표 박연철로부터 김원웅·정문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일 회부됨